

동북아 역사 포커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식민지 유산의 그림자와 발현

포커스 I 식민지 유산과 현재

포커스 II 식민지 유산의 발현

편집자의 글 전영옥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2호 기획편집위원 4

포커스 I

식민지 유산과 현재

식민의 역사와 현재의 타이완 11

왕타이성(王泰升) 국립타이완대학 강좌교수

전후 일본의 외국인 법제 속의 재일조선인 30

식민주의 유산과 남북 분단 속의 ‘조선적(籍)’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수센터 교수

미얀마 군부, 땃마도는 여전히 국가 수호자인가 42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교수

포커스 II

식민지 유산의 발현

반공주의라는 식민지 유산 59

이봉규 와세다대학 국제학술원 국제교양학부 조교수

일본 외무성 코리아스쿨의 탄생 69

박경민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저항운동 공간에서 냉전의 변방이 된 북강원도 84

현명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체험! 역사현장

역사의 재현과 비재현: 95

영화 <하얼빈>의 역사성과 현재성

전영옥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NAHF 톨아보기

중국의 새 대학교재 107

『중화민족공동체개론』과 한국고대사

임기환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Contents

Message from the Planning Editor of Vol.12 Jeon, Young-wook 4

Focus I The Legacy of Colonialism in the Present	Taiwan's Colonial Past and Present 11
	Wang, Tay-sheng
	Koreans in Post-war Japanese Legislation for Foreigners 30
	Chong, Young-hwan
	Myanmar's Armed Forces: Is Tatmadaw still the National Guardian? 42
	Jang, Jun-young
Focus II The Manifestation of Colonial Legacy	Anti-Communism as a Technique of the Colonial Bureaucracy in 20th Century Korea 59
	Lee, Bong-kyu
	Birth of Korea School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69
	Park, Kyung-min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from A Local Perspective: Case of North Gangwon 84
	Hyun, Myung -ho
Experiencing Historical Sites	Historical Representation and Non-representation: the Film <i>Harbin's</i> Historicity and Presentness 95
	Jeon, Young-wook
NAHF's Topical Investigation	China's new College Textbook <i>Zhonghua Minzu Gongtongti Gailun</i>(中華民族共同體概論) and Korean Ancient History 107
	Lim, Ki-hwan

한국에서 식민지 유산에 대한 성찰은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해방 이후 독립 국가의 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던 시기에는, 말 그대로 식민지였음을 보여주는 인적·물적 유산의 파괴가 시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곳곳에 남아 있던 황국신민서사지주나 신사 등은 식민지라는 어두운 과거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세리머니처럼 활기차게 철거되었습니다. 반민특위처럼 식민지의 인적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활동도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한일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의 관계가 다시 규정되기 시작했고, 한국의 경제성장이 식민지 청산의 대가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각종 기념관은 식민지 ‘유산’과 그 ‘청산’을 가시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광복 50주년에는 유산의 청산이 국가적 사업의 위상을 획득하면서 경복궁의 정면을 막고 있던 조선총독부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친일’ 진상을 규명하거나 강제동원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취지 역시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역사 현안을 다루는 것이므로 창립부터 ‘탈식민’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 유산에 역사적으로 접근할 때, 당대의 국내외 정세를 매우 중요한 변수로 유의해야 합니다. 해방 이후 냉전의 구심력이 강화되면서 식민지 유산을 둘러싼 논쟁은 상상 이상으로 단순해졌습니다. 반민특위의 해체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국가권력은 ‘반공’이란 칼자루를 쥐고 유산의 청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제국으로부터의 식민지 청산이 한국 경제의 노잣돈처럼 긍정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식민지 경험이 근대화를 추동했다는 의견도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8~90년대에 추구된 청산

은 ‘반일(反日)’로 수렴됩니다. 이는 독재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거나 문민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과시하는 일과 궤를 하나로 했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안정되자 비로소 이행기 정의를 수행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산과 청산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식민지 유산이란 표현은 꽤 대중적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논쟁해 본 경험은 생각보다 축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역사적 경로 속에서 유산(legacy)이 보통 잔재(殘在, remnants)로만 취급되었던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문제 제기는 식민지 유산이 가지는 긍정적인 요소도 함께 봐야 한다는, 다분히 양가적인 접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보다는 지배-복종-타협-저항 등으로 표현되는 식민지 체험의 다양한 모습이 어떻게 유산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재했던 식민지 체험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것이 당대의 우리에게 끼쳐 왔던 영향을 역사적으로 파악하며, 이로써 ‘식민지 유산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 그리고 이 질문에 관한 열린 논쟁을 지향하고 자연스럽게 ‘탈식민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 뒤따르게 하는 것, 지금 단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커스 편집위원회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이에 관한 문제를 환기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그 방법에 대해, 첫째로 식민지를 경험한 몇몇 지역의 현재를 살핌으로써 식민지 유산의 문제가 비단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민지 유산의 현재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지금 한국에서 탈

식민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두드러지도록 고찰할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식민지 유산이 실제로 발견된 과거의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유산의 현재 모습에 역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민지 유산의 현재와 과거를 다각적으로 살피는 작업이 탈식민이라는 과제를 설정하는 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더불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세심히 되짚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커스 I」에는 타이완의 식민지 인식과 재일조선인의 국적, 그리고 미얀마 군부를 주제로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국립타이완대학의 왕타이성(王泰升) 강좌교수는 현재 타이완의 식민지 인식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타이완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시기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릅니다. 왕타이성 교수는 전후에 타이완 사회가 겪은 ‘또 한 번의 식민지’ 경험을 주요한 변수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식민통치 자체가 ‘의심의 여지 없이 ‘나쁜 것’”이라는 필자의 선언은, 사실 일본과 중국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식민지 유산이 중첩되었다고 볼 수 있는 타이완의 현재는, 특히 ‘반일’이 동아시아의 탈식민으로 연결되는 경향성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시하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메이지가쿠인대학 정영환 교수는 전후 일본의 외국인 법제가 품고 있는 식민주의의 문제를 재일조선인의 국적과 연결하여 새삼 환기합니다. 일본 정부가 식민지와 제국의 유산을 폭력적으로 활용하면서 ‘외국인이란 누구인가’란 난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증거가 바로 조선적(籍)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의식은, 실제로 그가 조선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당사자성을 담보하

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주도한 탈식민의 실제 또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어찌면 식민지 유산을 극복한 이후의 세계를 낙관적으로 상상하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조선적의 역사와 현재를 부각하는 일은 탈식민 과정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준영 연구교수의 글은 현재 미얀마를 통치하고 있는 군부의 역사 전반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이 군사 독재정권의 과거를 거쳤다는 점에서 특히 새롭습니다. 미얀마 정규군을 일컫는 뜻마도의 역사적 변화는 일종의 시대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극적입니다. 뜻마도는 “일본을 향한 저항기구”이자 “근대 미얀마를 창출했던 혁명기구”로서 식민지 유산의 극복을 주도하는 주체였습니다. ‘독립의 주체’가 ‘독재의 주체’로 변모하고, 이로써 ‘독립의 대상’이 된 현상은 식민지 유산의 성격이 역사적으로 변화해 간 사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포커스 I」의 주제가 현재진행형인 식민지 유산의 모습을 통시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포커스 II」는 유산의 당대에 집중합니다. 더불어 이를 한국, 일본, 북한의 사례로 살펴보면서 유산의 발현 양상을 한국과 직접 연결하여 고민할 수 있도록 글을 구성했습니다.

와세다대학의 이봉규 교수는 해방 이후 한국의 반공주의를 냉전의 고유한 산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관료 출신들이 실제로 가지고 온 유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반공주의를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출현한 지적 아이디어로 설명하고, 해방 이후 어떻게 한국으로 흘렀는지를 윤우경, 홍순봉 등의 사례로부터 추적합니다. 언뜻 보면 인적 유산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해방 이후의 반공주의를 구성했던 다양한 체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박경민 교수는 1965년 한일협정에 실무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마에다 도시카즈(前田利一)의 사례가 사뭇 다른 식민지 유산의 모습이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조선총독부 관료로 부임했다가 패전 이후 일본 외무성 관료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식민지를 미화하는 식민자의 전형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마에다의 한국 관련 활동은 이와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식민지 역사를 인식하는 태도가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간 진행되는 청산의 최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재단 현명호 연구위원은 유산이라는 정치적 개념을 공간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북강원도는 원산을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공간입니다. 더불어 식민지 시기 원산총파업으로 상징되듯이 저항의 관성이 쌓여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선 독자에게는 한국과 북한 모두에 강원도라는 행정구역이 존재한다는,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일차적으로 고민거리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북강원도를 재편하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가 ‘저항이라는 식민지 유산’을 체계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유산 간의 경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체험! 역사현장」에는 영화 <하얼빈>을 다루는 글이 실렸습니다. 재단 전영욱 연구위원은 안중근의 인간적인 변민을 다루려 하는 이 영화의 목적에 대해 논하려고 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미 위인으로 고정된 안중근을 또다시 영웅으로 치장하는 일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과거와 지금의 당대성을 고려하면서 독립이라는 가치를 시공간적으로 연결하려 했다는 점에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이번 호 기획과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주체의 회복과 탈식민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NAHF 톨아보기」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재단이 주목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역사 현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첫 글로 현재 중국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화민족공동체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임기환 명예교수는 시진핑 신시대의 중화민족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등장했는지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불거진 중국의 ‘동북공정’ 이슈가 한국에서는 이미 휘발되었지만, 중국에서는 몇 가지 ‘공정’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지금의 중화민족공동체론으로 이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화민족공동체론 내에 한국고대사의 분량이 적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로 연결됩니다. 필자가 제기하는 ‘해답’, 다시 말해 역사서술 자체를 비판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술의 바탕을 비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현안에 접근하는 본질적인 관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호도 여러 훌륭한 필자에게 많은 빛을 지었습니다.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해당하는 올해의 첫 출발이 독자에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2호 기획편집위원
전영욱

포커스 I

식민지 유산과 현재

식민의 역사와 현재의 타이완

왕타이성 국립타이완대학 강좌교수

전후 일본의 외국인 법제 속의 재일조선인: 식민주의 유산과 남북 분단 속의 '조선적(籍)'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수센터 교수

미얀마 군부, 땃마도는 여전히 국가 수호자인가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교수



식민의 역사와 현재의 타이완

왕타이성(王泰升) 국립타이완대학 강좌교수

1. '역사 인식' 문제

일본은 1895년부터 타이완을 식민통치하였다. 이는 2025년인 오늘날로부터 130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현재 타이완인이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일본 통치가 종식된 1945년부터 현재까지 80년 동안 각계에서 품어온 상이한 '역사 인식'의 산물이다. 이는 국가와 민간 사이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중국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국민당은 연합군을 대표해 일본 통치하에 있던 타이완을 접수했다.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자, 국민당은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중국의 정통정부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타이완(식민 역사를 겪지 않은 진먼(金門)과 마쭈(馬祖) 두 섬 포함)만 통치하였다.¹ 1950년부터 타이완의 국가교육은 중국의

1 王泰升, 2016, 「台灣對歐陸民法的繼承及其獨特性」, 『법학논집』 20-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74~75, 80쪽.

“

일본 식민통치를 경험한 가정에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어른들이 누군가가 성실하게 일했을 때,
‘일본 정신을 갖추었다’라는 말로 칭찬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분명 그들이 말하는 ‘일본 시대’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일본 점령 시기’와 달리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였다.

”

반일(仇日)역사관에서 나왔기에 ‘일본 통치 시기(日治時期)’의 역사를 ‘식민통치의 착취를 받은’ 타이완인의 끊임없는 ‘항일’의 역사로 간주했다.

그러나 타이완 민간에서 실제로 일본 통치를 50년간 겪은 사람들은 이 시기 역사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60여 살에 이른 필자 세대는 국민당 버전의 역사를 배웠지만, 일본 식민통치를 경험한 가정에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어른들이 누군가가 성실하게 일했을 때, ‘일본 정신을 갖추었다’라는 말로 칭찬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분명 그들이 말하는 ‘일본 시대’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일본 점령 시기(日據時期)’와 달리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였다.

타이완은 1990년대 민주화 이후 ‘일본 정신을 갖춘’ 리덩후이(李登輝) 타이완 총통 재임 시기에 국가교육에서 ‘타이완 인식하기(認識臺灣)’라는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일본 통치 시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서술하는 역사서사를 채택했다. 이로 인해 필자보다 젊은 세대는 일본의 타이완 식민 역사에 대해 비교적 다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민주 사회에서는 다른 정서와 의견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용을 갖추어야 하지만, 학술에서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며 상호 비판이 가능한 역사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

일본 식민통치자의 동기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아 있는 통치의 결과 역시 담담히 직면해야 한다. 일본의 타이완 통치기구인 타이완총독부의 내부 당안(檔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이 타이완에서 시행한 법령은 동기상 모두 일본제국, 즉 식민 모국의 최고 이익을 추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양치기가 양 떼를 돌보는 이유가 양가죽과 양젖을 얻기 위한 것임과 같다.

그러나 후술할 내용과 같이, 일본 통치당국은 제한적으로 근대식 법원과 청렴한 사법관을 타이완에 들여왔다. 물론 일본 통치 전반기에는 정치적 저항자에게 잔혹한 형벌을 부과했으나, 후반기에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그리 엄격하지 않은 제재를 가했다. 다만 인권보장 절차가 결여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민사재산법 관련 사항은 일본 통치 전반기에 원칙상 타이완인의 관습에 따라 처리하면서 타이완인에게 20여 년의 과도기를 가지도록 했다. 후반기에 들어서야 일본의 근대 민상법을 따르도록 개정했다. 그렇다고 일본이 타이완에서 ‘좋은’ 식민통치를 실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식민통치 자체가 의심할 여지 없이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류 사회에서 다시는 현지인의 행복을 희생하여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지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타이완을 병합하고자 뾰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포함한다.

먼저 위와 같은 역사적 평가의 입장을 확립해야만, 마음속의 걱정이나 부담감 없이 일본의 반세기에 걸친 식민통치를 고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도 모든 것을 식민주의의 압박이라는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본제국이 타이완에서 시행한 실제적인 통치 방식과 행위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려 한다. 아울러 민국시대(1912~1949) 중국에서 유래한 전

“

오늘날 인류 사회에서 다시는 현지인의 행복을 희생하여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지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타이완을 병합하고자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포함한다.

”

후 국민당 정권의 통치 형태와 연결하여, 일본의 타이완 통치 50년이란 식민지 역사와 오늘날의 타이완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외래 소수민족의 전제정치

1895년에 일본제국이 직면한 것은 아직 근대적 세례를 받지 못했고, 한인(漢人) 이주민이 주를 이룬 타이완 사회였다. 원래 타이완에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南島語族)’에 속하는 원주민들이 거주하였는데, 이들은 17세기 이전까지 동아시아에서 2,000여 년간 성행한 조공체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 및 유교를 핵심으로 하는 중원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1624년 네덜란드인이 타이완에 와서 38년의 식민통치를 시행했을 때, 비로소 한인 이주민을 끌어들이 타이완을 ‘개발’하였다. 한인에 속하는 정성공(鄭成功) 정권은 네덜란드인을 대신해 타이완을 21년간 다스리면서 청 왕조에 대항하였다. 이 때문에 청은 1684년 처음으로 타이완에 관부(官府)를 두고 타이완에서 천조의 권위에 대항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것에 주의 깊게 대비하였다. 타이완의 한인 이주민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지방 통치에서 배제되었다. 청 통치하에서 타이완의 한인 이주민은 1860년 개항 이후에야 서양인과 조금씩 접촉하기 시작했다. 또한 1895년

포커스 I

이후 중국 대륙에서 나타난 중국 내셔널리즘(國族主義)과도 무관했으며, 일본 통치 이후 일본인을 ‘타자’로 삼아 형성된 타이완인의 정체성도 아직 응집되지 않았다. 사실 1887년에 이르러서야 타이완은 비로소 청에 의해 하나의 성(省)으로 간주되었다. 1895년 대청제국이 타이완 할양을 결정했을 때, 근대국가와 유사한 ‘타이완 민주국’이 출현했다. 그러나 타이완 주민이 아니라 청의 관리와 군대가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붕괴하였다. 이는 1910년에 일본이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조선(대한제국)을 병합한 사건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국제법상 대청제국이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일본에 이양한다는 조약이 있었지만, 사실상 일본은 무력으로 타이완을 정복했다. 청의 관리와 군대가 중국으로 도피한 것과 달리 타이완에서 토지를 개간하고 사병을 소유하며 청에 대항한 바 있었던 지방 호족들은 1895년부터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대화된 일본군에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일본제국은 190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군사적 유혈 진압을 통해 타이완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를 통제할 수 있었다. 8년간 약 32,000명이 일본 통치자들에게 살해되었는데, 이는 당시 타이완 총인구의 1%를 넘는 수치였다. 이러한 저항을 과연 치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² 한편, 당시 서양인이나 한인과 왕래하지 않고 ‘근대’를 알지 못했던 일부 타이완 원주민을 일본 제국은 ‘번인(蕃人)’이라고 칭했다. 일본은 처음에 이들을 야수와 같은 존재로 여겼으며, 1915년에 무력으로 완전히 정복한 뒤에는 경찰체제를 통해 통치하였다.

2 王泰升, 2014, 『台灣日治時期的法律改革』, 台北: 聯經(수정판), 233-247쪽 참고.

포커스 I

타이완인의 격렬한 무장항일투쟁은 일본제국이 타이완에서 서구 열강의 식민통치 모델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이전에 병합했던 류큐(琉球)를 하나의 현(縣)으로 간주했던 것과 달랐다. 그 특징은 타이완 통치를 전담한 총독이 형식상으로 천황에게 칙재(勅裁)를 받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내각의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율령(律令)’[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것은 ‘제령(制令)’이라 칭함]을 반포할 수 있으며, 타이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입법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국의회는 여전히 타이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다. 또한 어떤 법률[예를 들어 메이지민법전(明治民法典)]은 내각을 통과하고 천황의 재가를 받아 칙령으로 공포하면, 바로 타이완에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었다. 1922년부터는 ‘특례칙령(特例勅令)’(조선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을 반포할 수 있었는데, 타이완의 필요에 따라 기존 법률에 특별규정을 추가하는 형태였다. 이는 타이완총독이, 일본 내각이 최종적인 부결권을 가진 상태에서 입법권을 행사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타이완총독은 제국 정부에 의해 임명되었으므로 당연히 제국의 전체적인 식민지 통치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타이완총독은 ‘타이완 지역’의 행정사무를 총괄하였는데, 이른바 총독부평의회는 초기에 전적으로 총독부 관료로 이루어졌으며, 후기에는 부분적으로 민간 인사가 추가되었지만 단지 자문만 제공할 뿐 총독의 결정을 변경할 수는 없었다.

1920년 이후 총독부의 행정권력의 일부가 지방정부에 이관되었지만, 지방행정기구의 수장은 여전히 총독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다만 총독은 타이완 법원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가졌어도 개별 안건의 사법심판권은 없었다. 따라서 타이완총독은 ‘행정·입법·사법 3권을 모두 가진 황제와 같은 통치자(土皇帝)’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1919년 이후 일반 문관

포커스 I

이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별도의 타이완 군사령관이 설치된 이후에는 군사권도 사라졌다. 마지막 무관 총독이 타이완 군사령관을 겸임했던 때를 제외하고, 총독은 군사적 권한을 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타이완총독이 타이완 식민지에서 상당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³

이와 같이 권력이 집중되고 전제적인 식민지체제에서 고위통치계층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타이완인은 ‘소수민족의 통치(小數族群統治)’ 아래에서 일본제국의 ‘2등 국민’일 뿐이었다. 1895년 당시 타이완인 중에는 근대적인 법률·행정 인재가 전혀 없었는데, 일본인은 이 틈을 타 총독부의 모든 중간 및 고위 관직을 독점했다. 매우 드문 사례를 제외하고, 타이완인은 일본어를 익힌 후에야 비로소 하급관료가 될 기회를 얻었다.

일본 통치 시기의 타이완인은 근대교육을 받을 때 의과를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그다음이 법과였다. 그런데도 1919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타이완인 변호사가 등장했다. 그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45년에는 총 109명의 변호사 중 타이완인이 46명이었다. 타이완인 판사는 1931년이 되어서야 타이완 법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통치 말기에도 총 66명의 법관 중 단 7명만이 타이완인이었다. 검찰관은 타이완인 중에서 배출된 적이 없었다. 이는 한편으로 병합되기 전 타이완인이 정부 부문에서 관직을 맡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일본 통치 50년 동안 타이완인은 총독부 내 고위직 또는 지방의 주(州)와 청(廳)의 장관을 맡은 적이 없었으며,

3 일본제국의 정계에서 타이완총독을 맡은 사람의 명성은 일반적으로 조선총독을 맡은 사람보다 낮았다. 이는 제국 정부에서 타이완총독부에 대한 감독의 정도가 조선총독부보다 더 컸을 수 있다. 王泰升, 2022a, 『台灣法律史概論』, 台北: 元照(6版), 129~135, 158~163쪽 참고.

단 한 명만이 지방 중급 정부(郡)의 수장이 되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교사와 경찰을 막론하고 고위직에는 타이완인이 전혀 없었다.

경제적으로도 아편·식염·장뇌·담배·술 등 전매사업은 모두 총독부 혹은 일본인 기업이 독점했으며, 산업의 하위 단계에서 총독부와 가까운 타이완인에게만 독점이익이 나누어졌다. 타이완인은 단지 정부 규제가 비교적 적은 일반물품 교역에서만 중소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타이완인은 ‘협력자’로서 일본인보다 낮은 위치에 머물렀다. 1935년부터 타이완의 지방의원선거에서 절반은 정부에서 임명하였는데, 이 중 권력이 비교적 큰 주(州)·시(市)의 의원은 일본인이 다수였고, 권력이 비교적 작은 가장협의원(街庄協議員)에서는 타이완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임명직과 민선직을 합한 전체 의원을 논해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타이완 전체 인구에서 일본인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더 우월한 지위를 누렸던 민족정치(族群政治)체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1920년대, 일본 통치 시기에 성장한 신세대 타이완인들은 근대적 성격의 정치적 저항운동을 시작했다. 근대 법률 및 행정 지식을 습득한 다수의 타이완인은 당시 일본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분위기 속에서 자유권을 주장하며 일본 국가의 전제정치에 맞서기로 했다. 이들은 메이지 헌정체제 내에서 의회민주주의제도를 활용해 타이완 통치에 참여하려고 했으며,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근거로 총독의 전제적 통치를 견제하고 타이완인의 정치적 참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이완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또한 이들은 캐나다와 호주 등을 모델로 한 식민지자치를 쟁취하고자 했다. 이러한 청원운동은 타이완인 자산계급뿐만 아니라 일반민중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많은 협력자들을 동원하여 이를 반대하게 하였으며,

“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고 투쟁노선이 분열된 타이완인의 정치운동은 총독부의 전제정치를 실질적으로 흔들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타이완 사회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씨앗을 심었으며, 전후에는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랐다.

”

제국의회 또한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당시 또 다른 타이완 엘리트 지식인들은 일본의 국가 주권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였는데, 예를 들면 타이완 민족독립을 주장한 타이완 공산당이나 혹은 중국이 타이완인의 반일활동에 협조하기를 바란 지식인 등이 있다. 그러나 근대 법률과 정치 사조가 여전히 생소한 타이완 민중은 급진적인 항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고 투쟁노선이 분열된 타이완인의 정치운동은 총독부의 전제정치를 실질적으로 흔들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타이완 사회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씨앗을 심었으며, 전후에는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랐다.⁴

3. 사법과 경찰이 권위적인 통치의 주력이 되다

일본 식민통치 초기 일본제국은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타이완인들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단’하거나 ‘특별 사법 절차에 따른 심판’

4 王泰升, 2022a, 위의 책, 162~163, 185~186, 229~231, 237~239쪽; 王泰升, 2014, 앞의 책, 119~122, 125~128, 395~397쪽 참고.

을 통해 잔혹하게 탄압하였다. 초기의 짧은 군정(軍政)시기를 제외하고, 1896년 4월부터 타이완총독은 법원이 수리한 정치범 안전에 대한 심판권이 전혀 없었다. 이는 법원 내 일본인 사법관이 형법에 따라 항일운동가들에게 부과하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898년 긴급 율령으로 <비도형벌령(匪徒刑罰令)>을 제정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한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였는데, 1902년에는 비도사건의 사형 판결 비율이 70%를 초과했다. 1895년에서 1902년까지 이어진 무장항일운동에서 ‘비도’라 불린 타이완인 저항자 중 약 4분의 1만이 법원 절차를 거쳐 처형되었으며, 대다수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군대에 의해 총살되었다. 이어서 1907년부터 1916년 사이에 여러 차례 개별적인 무장항일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일반 사법관으로 구성된 임시법원을 통해 처리되었다. 임시법원은 1심 종결 방식을 취하였고, <비도형벌령>을 적용하였다. 예컨대 1915년 서래암(西來庵)사건에서는 866명의 피고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심지어 군경은 무차별한 살육을 통해 민중의 항일운동을 위축시키려 했다.

다만 일본 식민통치 후기에 통치당국은 타이완 정치범에 대해 ‘통상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고, 형벌 또한 초기처럼 가혹하지는 않았다. 총독부는 1919년 사법개혁에서 임시법원제도를 폐지했다. 1920년대 타이완인의 정치운동이 집회와 시위 등 근대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법원은 일반 형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정치범을 심리했다. 이 시기의 정치범 사건은 대부분 <치안유지법>, <치안경찰법> 혹은 불경죄 등의 ‘정치 형법’이 아닌, 공무방해·상해·폭행죄 등의 ‘일반 형법’을 적용하였다. 법원은 <치안경찰법>을 인용하여 ‘타이완 의회 설치 청원 운동’을 추진한 몇몇 인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지만, 최대 중형은

포커스 I

유기징역 4개월에 불과했다. 게다가 일본 통치 전 기간에 법원의 형사판결 원본을 살펴보면, 해당 법을 위반한 정치범에게 가장 많이 부과된 것은 벌금이였다.

또한 법원이 1920년대 농민운동에 참여한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법정형인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것은 1%도 되지 않았다. 만약 모든 범죄통계 기록을 다시 검토해 본다면, 오로지 정치사상범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당 법을 사법 기관이 원용한 경우가 일본 내지 혹은 조선보다 타이완이 훨씬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제국은 일본 내지 및 조선에서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보호관찰’이라 불리는 감시 조치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예방 구금’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 두 조치는 타이완에서 시행되지 않았다. 타이완에서 이전부터 보갑(保甲) 및 부랑자 단속 등의 제도가 있어 ‘위험한 사상’을 갖춘 잠재적인 정치범을 충분히 감시하거나 구금할 수 있었다. 1937년 전쟁 상황에 들어선 이후 타이완 군사령관과 헌병이 통치에 참여할 기회가 어느 정도 늘어났지만, 타이완의 통치 주력은 여전히 총독부의 지휘 아래 있는 경찰이었다.⁵

일본제국은 1902년 통치 초기, 무장저항세력을 소멸한 후 곧바로 타이완에 경찰체계와 형사법원이 운영하는 범죄통제체계를 구축하여 식민지의 사회질서를 유지했다. 일본 통치 시기 타이완 경찰체계의 하부 경찰은 지방의 보갑조직을 활용해 인민의 일상생활을 통제하였다. 일단 범죄 사실이 적발되면, 대다수의 경우 경범죄 혐의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3개월

5 王泰升, 2014, 앞의 책, 233~265쪽 참고.

포커스 I

이하의 유기징역, 100위안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도박죄와 폭행죄 혹은 행정규칙 위반 등의 혐의였다.

이들은 고위 경찰관에 의해 ‘범죄즉결(犯罪卽決)’로 처리되었으며, 즉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경찰의 권위에 눌러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 비교적 소수의 경우는 앞서 서술한 혐의 외에 더 중한 죄로 법원에 이송되어 검찰관·법관이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또한 하부 경찰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여기면, 그 사람을 ‘부랑자’로 제보할 수 있었으며, 지방 경찰 주관의 심의와 총독의 승인을 거친 후에 경찰기관에 설치된 수용소 내부의 강제 노동으로 보내서 범죄를 예방하려 했다. 1920년대 말 경찰은 이 제도를 정치적 반대 인사를 다루는 데 이용했다.

이와 같은 체제 아래, 일본 통치 시기 타이완에서 대다수의 형사 안건은 법원의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에서 심리를 거친 비교적 중한 죄는 그 선고형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았다. 1920년대부터 법원이 부과한 형사재판은 주로 벌금이었으며, 통치 초기에 실시한 태형은 이미 폐지되었다. 유기징역형을 판결받은 자도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약 10%를 차지했을 뿐이었으며 형량도 대체로 ‘6개월 이하’였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매우 적었다. 일본 제국은 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최소한의 통치비용을 들였고, 집행에서는 ‘필벌(必罰)’을 하였으나 형량에서는 ‘중벌(重罰)’하지 않는 것으로 범죄를 억제하며 식민지에서 ‘치안 양호’의 이미지를 형성했다.⁶

6 王泰升, 2014, 앞의 책, 271~282, 295~299쪽 참고.

4. 근대 민상법제와 법원

일본은 타이완 통치 초기, 무력 진압과 동시에 타이완인을 달래기 위해 민사와 상사에서 ‘구관온존(舊慣溫存)’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근대 민법의 일부를 도입했다. 일본 통치 전기(1895~1922)에는 타이완의 민상(民商) 사항에 일본인이 연계되었다면 율령에 따라 서구에서 계수(繼受)한 민상법(民商法) 규정을 따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이완 ‘구관(舊慣)’을 따랐다. 타이완인이 일본인과 왕래하며 법률적 관계가 발생하는 일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대다수 타이완인은 자신들의 전통적 법률 관습에 따라 생활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율령에 규정된 타이완의 토지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일률적으로 ‘구관’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일본의 민상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느 일본인 혹은 기업이 타이완에서 토지를 구매하려면, 모두 상당히 생소한 타이완 지주의 규율(타이완의 구관)에 따라야 했다. 이는 한때 격렬한 항일투쟁을 벌인 타이완 지주계급을 우선 보호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실제로는 타이완인이 익숙하지 않은 근대 민법 개념에 따라 ‘구관’의 내용을 해석하고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개조한 것이다.

일본제국은 통치 10년 동안(1895~1905) 청 통치 시기에는 없었던 근대적인 재산권 및 계약 제도를 구축하였다. 근대화된 토지조사를 통해 타이완 평원지대의 토지 각각에 대한 소유권의 경계 및 귀속을 확정하였고, 타이완 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조호(大租戶)’⁷와 ‘소조호(小租戶)’⁸

7 [역자주] 관부(官府)에 출원하여 경작 인허(墾照)를 받은 사람.

8 [역자주] 자기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개간하고 토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

1896년 7월 15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근대 민사법원은 사적 권리의 실현을 확실히 보장했다.
이들 법원은 근대 민법의 개념으로 타이완인의 다양한 노동 혹은
재화의 거래관계를 해석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서구에서
계수한 계약법 원칙을 도입하여 일본 통치 시기의
타이완 계약법을 형성했다.

”

가 모두 지주가 될 수 있는 전통을 폐지했다. 또한 타이완의 옛 용어인 소위 ‘전권(典權)’과 ‘태권(胎權)’을 서구 자본주의 민법상의 질권(質權)과 저당권(抵押權)으로 전환했고, 권리등기제도도 구축하여 시장 교역을 원활히 했다. 게다가 타이완 전역에 분포하여 1896년 7월 15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근대 민사법원은 사적 권리의 실현을 확실히 보장했다. 이들 법원은 근대 민법의 개념으로 타이완인의 다양한 노동 혹은 재화의 거래관계를 해석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서구에서 계수한 계약법 원칙을 도입하여 일본 통치 시기의 타이완 계약법을 형성했다.

근대 민상법은 본래 근대 서구 자산계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타이완의 자산가 내지는 일반대중들도 과거의 상업 또는 거래 경험을 통해 이 점을 빠르게 깨닫고 잘 활용했다. 예를 들어 일본 통치 전기에 타이완인으로 구성된 기업은 ‘구관’에 따르면 일본 상법에 준거한 근대식 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다. 영민한 타이완인은 일본인을 명의(人頭)로 하여 법률상 일본인이 관여한다는 명분을 만들고, 일본 상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했다.

“

일본 통치 후기에 이르러서는 청렴하다고 공인된 법관이 ‘법에 따라’ 심판하는 근대 민사법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비율이 지방행정관원을 이용해 조정하는 비율의 두 배에 달했다. 일본 통치하에서 타이완인들의 사법정의에 대한 관념 역시 일정 부분 근대적으로 전환되었다.

”

1923년부터 일본 민상법은 민법의 친족과 상속 두 편을 제외하고 타이완에서 모두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타이완인들은 근대 민상법을 더욱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게다가 법원은 타이완인의 친족 및 상속 관습법에 상속 제한·상속 포기 등 서구 민법상의 제도를 다수 도입함으로써 근대 민법 이념에 어긋나는 한족의 법률 전통을 더욱 부정했다.

타이완인은 형사사건에서 국가의 통제에만 의존해야 했던 상황과 달리, 민사분쟁 해결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다. 일본 통치 전기에는 지방행정관원이 ‘상식과 이치(情理)에 따라’ 판결하는 민사쟁송조정(民事爭訟調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통치 후기에 이르러서는 청렴하다고 공인된 법관이 ‘법에 따라’ 심판하는 근대 민사법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비율이 지방행정관원을 이용해 조정하는 비율의 두 배에 달했다. 일본 통치하에서 타이완인들의 사법정의에 대한 관념 역시 일정 부분 근대적으로 전환되었다.⁹

9 王泰升, 2014, 앞의 책, 196~217, 311~373쪽. 일본 통치 시기 타이베이 지방 법원의 민사 판결에 대한 분석은 王泰升, 2022b, 『去法院相告: 日治台灣司法正義觀的轉型』, 台北: 臺大出版中心(증정판), 111~168쪽 참고.

5. '일본 점령(日據)'에서 '일본 통치(日治)'로 변화하는 역사서사

1945년 국민당이 집권한 중국은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을 대표하여 타이완을 접수한 후 하나의 성(省)으로 간주했다. 일본 통치하에서 타이완인은 '본성인(本省人)'으로 불렸으며, 타이완과 거의 교류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온 시간이 반세기에 달하는 중국 대륙 출신 이주민은 '외성인(外省人)'이라 불렸다. 일본 통치 50년의 경험을 한 본성인 중에는 이 시기 법률과 정치 분야에 인재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국민당이 타이완 통치를 위해 설치한 행정권을 총괄하고 경비 총사령관을 겸하는 행정장관을 이전의 총독에 비유했다. 행정장관의 관공서 내 거의 모든 고위관료가 외성인으로 구성된 점은 전쟁 전에 일본인이 타이완의 통치 고위층을 독점했던 상황과 유사했다.

이로써 본성인이 일본 통치 시기에 '2등 국민'으로 전락했던 비통한 감정은 국민당 정권이 '광복'을 선언했음에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인이 떠나면 바로 자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결국 무산되면서 더욱 실망하였다. 특히 1947년에 발생한 2·28사건에서 외성인으로 구성된 국민당 통치당국은 군대까지 동원해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고, 재판 없이 본성인 엘리트층을 살해했다. 마치 일본 통치 초기 외래 정부의 잔혹하고 무정한 무력 진압으로 되돌아간 듯하였고, 두 족군 사이에 간극을 비롯해 심지어 적대감을 조성했다. 게다가 일본 통치 말기를 거치며 일정 정도 근대적인 관념을 갖춘 본성인들은 일본 정권이 이와 같이 무법천지에 이르지 않았으며, 국민당 정권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악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1949년, 국민당은 중화민국 정부를 타이완으로 옮겼으며, 이후 국민당 정부가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영토는 이전 일본 통치 시기의 타이완과 거

포커스 I

의 똑같아졌다. 1950년대부터 본성인이 타이완 총인구의 86~87%를 차지했지만, 소수의 외성인이 중앙정부의 행정·입법·사법 등의 주요 부문을 독점했다. 본성인들은 권력이 상당히 작은 지방정부에만 참여할 공간이 있었다.

197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민당은 극소수의 본성인을 선발해 중앙국정에 참여시키기 시작했다. 동시에 외성인은 모두 타이완의 산업·교육·문화 등 각 방면에서 지도계층에 위치하였다. 국민당 정권은 중국 대륙의 지속적인 내전을 이유로 계엄을 실시하였고, 주로 본성인으로 구성된 정치적 반대세력의 자유와 민주주의 추구를 억압했다. 이는 곧 일본 통치 시기 민족(族群)정치, 외래 정권 전제정치의 재현이다. 그러나 국민당 정권은 타이완 통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식민 모국’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본성인 정치 엘리트를 통치집단에 포함시켜야 했다. 이는 본성인 정치 엘리트가 이끄는 정치반대운동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전후에 타이완은 일본 통치 시기와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다. 1987년에 계엄이 해제되었고, 1991년에는 모든 전시체제가 종식되었다. 1992년에는 형법이 개정되어 정치적 반대자들이 단순히 발언이나 주장만으로 형벌을 받는 일은 사라졌다. 본성인과 외성인 간에 울타리가 이미 사라진 타이완 국민은 130년 전 일본 식민통치자가 세우고, 전후 국민당이 계승한 권위적인 억압체제에서 벗어나 이 시기 식민 역사의 유산을 완전히 전복시켰다.¹⁰

10 若林正文著·李承機等譯, 2014, 『戰後臺灣政治史: 中華民國臺灣化的歷程』, 台北: 臺大出版中心, 3쪽; 王泰升, 2022a, 앞의 책, 139~144, 168~169, 235, 271~273쪽; 王泰升, 2014, 앞의 책, 396~397쪽 참고.

“

1990년대 민주화 이후에야 비로소 타이완 사회는
본성인과 외성인의 역사적 경험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점차 가지게 되었다. 그제야 ‘일본 통치’ 시기의 타이완 역사에 대해
보다 이성적이고 전면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
시간은 확실히 역사적 아픔의 일부를 가져갔다.

”

전후에 성장한 본성인이 학교교육에서 배운 것은 중국 민족주의에 기반한 내용이다. 따라서 일본의 타이완 통치 초기의 항일과 진압만을 말할 뿐 통치 중기와 후기의 변화와 발전을 포함한 ‘일본 점령(日據)’의 역사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당 통치당국이 이전 일본 정권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인데, 각 방면에서 권력을 장악한 외성인들 역시 대일항전의 역사기억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일본 통치 말기를 경험한 본성인들은 공적 영역에서 당시 생애 경험을 ‘잊도록’ 강요당했다. 그러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는 그리운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것은 때로 ‘친일’로 해석되었다.

1990년대 민주화 이후에야 비로소 타이완 사회는 본성인과 외성인의 역사적 경험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점차 가지게 되었다. 그제야 ‘일본 통치(日治)’ 시기의 타이완 역사에 대해 보다 이성적이고 전면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 시간은 확실히 역사적 아픔의 일부를 가져갔다. 예를 들어 ‘일본 시대’에 일본 금융업계에서 도입되어 전후 타이완 사회에서 계속 사용된 최고한도액저당권(最高限額抵押權)과 양도담보(讓與擔保)를 보자. 현재 전자는 이미 입법기관에 의해 타이완 민법 물권편에

포커스 I

들어갔고, 후자는 타이완의 관습법으로 인식되어 법원에서 민법상의 물권 중 하나로 승인되고 있다.

참고문헌

- 若林正文著·李承機等譯, 2014, 「戰後臺灣政治史:中華民國臺灣化的歷程」, 台北:臺大出版中心.
- 王泰升, 2014, 「台灣日治時期的法律改革」, 台北:聯經.
- 王泰升, 2016, 「台灣對歐陸民法的繼承及其獨特性」, 「법학논집」 20-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王泰升, 2022a, 「台灣法律史概論」, 台北:元照(6版).
- 王泰升, 2022b, 「去法院相告:日治台灣司法正義觀的轉型」, 台北:臺大出版中心.



왕타이성(王泰升, Wang, Tay-sheng)

국립타이완대학 강좌교수

국립타이완대학의 강좌교수이자 중앙연구원의 타이완사연구소와 법률연구소의 공동연구원이며, 타이완 교육부의 종신 명예 국가강좌교수이다. 타이완 법률사·법과 사회 연구에 전념하여 1992년 미국 시애틀 워싱턴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타이완 일본 통치 시기의 법률 개혁(台灣日治時期的法律改革)』 등 다수의 전문 서적 및 논문이 일본어·영어·한국어·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국제 학계에 소개되었다. 타이완 원주민 법, 왕조 및 민국시대의 중국법, 전전(戰前) 일본법, 근현대 서양 법 등 여러 요소가 오늘날 타이완의 다원적인 사회를 형성했음을 지적하고, 타이완 내 여러 민족의 역사서사를 포용하여 대법관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헌법을 해석하도록 돕고 있다.

전후 일본의 외국인 법제 속의 재일조선인

식민주의 유산과 남북 분단 속의 ‘조선적(籍)’

정영환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수센터 교수

1. 전후 일본의 외국인 법제와 식민지 지배의 유산

전후 일본의 외국인 법제 속에서 식민지 지배의 유산을 생각할 때, 패전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까지의 7년간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구 식민지 출신자의 참정권은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민족교육권은 왜 부정되었는지, 조선인은 왜 외국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조선적(籍)’은 어떻게 생겨났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7년간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일본의 외국인 법제 형성사는 외지인인 조선인을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서 배제하는 한편, 외국인으로서 새로운 관리체제로 포섭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지배의 유산은 이러한 조선인 포섭과 배제 과정에서 최대한 활용되었다. 특히 주목해

“

전후 일본의 외국인 법제 속에서 식민지 지배의 유산을 생각할 때,
패전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까지의 7년간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일본의 외국인 법제 형성사는 외지인인 조선인을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서 배제하는 한편, 외국인으로서
새로운 관리체제로 포섭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

야 할 것은 국적과 호적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한 주권을 강화조약
까지 유지하며, 따라서 조선인의 일본 국적도 조약 발효까지 변함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제국 신민으로서
일본의 경찰관에 복종시키고, 재일조선인의 노동쟁의나 귀환 요구를 봉
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국은 초기 <기본지령>(1945. 11. 1)에서 대
만계 중국인 및 조선인은 ‘군사상의 안전이 허락하는 한 해방인민’으로
취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신민으로 취급하는 것을 용인했다.

한편, 조선인을 일본인과 차별적으로 처우할 때는 호적제도를 활용
했다. 조선, 대만 등의 외지를 통치하면서 일본은 식민지인(외지인)과 일
본인(내지인)을 구분해서 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때 활용된 제도가 호적이
었다. 내지를 본적지로 하는 자에게는 <호적법>을, 조선을 본적지로 하는
자에게는 <조선호적령>을 적용했고, 양자의 이동은 혼인이나 입양을 제
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병역의 대상을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남자’라는 문구로 규정하면 사실상 일본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제한할 수 있었다.

포커스 I

1945년 12월 <중의원의원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과 대만인의 참정권을 박탈하였다. 그 배경에는 선거를 통해서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는 조선인의 등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법률상은 부칙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정지’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였다.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정권에서 배제하면 정부의 국적 해석과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적주의라는 식민지 제국의 유산을 활용한 것이다.

2. <외국인등록령>과 조선적의 탄생

조선인에게 <외국인등록령>을 적용하는 데에도 이러한 식민지 제국의 유산을 활용했다. 해방 직후 많은 조선인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대부분 조선인의 출신지였던 38선 이남 지역의 식량난과 주택난에 정치적 혼란이 더해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고, 1946년 여름 무렵부터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는 입국을 제한하는 한편, 재일조선인의 등록을 위한 법령 제정을 일본 정부에 명령했다. 이렇게 해서 1947년 5월 2일 시행된 법이 칙령 제207호 <외국인등록령>이다.

<외국인등록령>은 연합국 장병 등을 제외한 외국인의 등록과 등록증상시 휴대 의무,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했다. 그중에서도 제11조는 “대만인 중 내무장관이 정하는 자 및 조선인은 이 칙령의 적용에 관해서는 당분간 이를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간주한다’고 한 것은 <외국인등록령> 적용과 국적 문제를 분리하기 위함이다.

“

〈외국인등록령〉은 연합국 장병 등을 제외한 외국인의 등록과 등록증
상시 휴대 의무,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했다. 그중에서도 제11조는
“대만인 중 내무장관이 정하는 자 및 조선인은 이 칙령의 적용에 관해서는
당분간 이를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간주한다’고 한 것은
〈외국인등록령〉 적용과 국적 문제를 분리하기 위함이다.

”

〈외국인등록령〉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연맹을 비롯한 민족단체는 경찰의 개입 반대, 재류 합법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교섭을 벌였는데, 특히 강렬하게 반발한 것은 내무성의 국적 해석이었다. 조선인 단체로서는 조선의 주권이 여전히 일본에 있다는 식민주의적 논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인등록령〉을 통해 식민지시대부터의 송환 권한을 회복함으로써 다음 날(1947. 5. 3) 시행되는 〈신헌법〉(현행 〈일본국헌법〉)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서 조선인을 배제하는 데 성공한다.

‘조선적’이 탄생한 것도 〈외국인등록령〉 시행 때였다. 등록 시 내무성은 ‘국적(출신지)란에 대만인 및 조선인은 대만 또는 조선으로 기입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등록 의무가 있는 조선인은 ‘〈조선호적령〉의 적용을 받아야 할 자’로 규정되어 조선호적에 등재된 사람이 〈외국인등록령〉상의 조선적으로 통째로 전환하게 되었다. 조선적자(朝鮮籍者)는 1947년 12월 말일 현재 59만 8,508명으로 전체 등록자 63만 9,368명의 약 93.6%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에는 호적주의의 결과 조선인 남성과 법률혼을 한 일본인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등록이 필요한 대만인은



해방 직후 귀국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재도항동포'의 소식을 전하는 『해방신문』(1946. 12. 1)

‘중화민국 주일대표부로부터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연합국 장병 이외의 자로 규정되어 조선인과 달리 호적주의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는 중화민국이 연합국이었기 때문이다.

3. 분단과 전쟁 속 '국적 선택의 자유'

전후 일본의 외국인 법제에는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첫걸음은 외국인등록에서 국적을 조선과 한국으로 분단하는 것이었다.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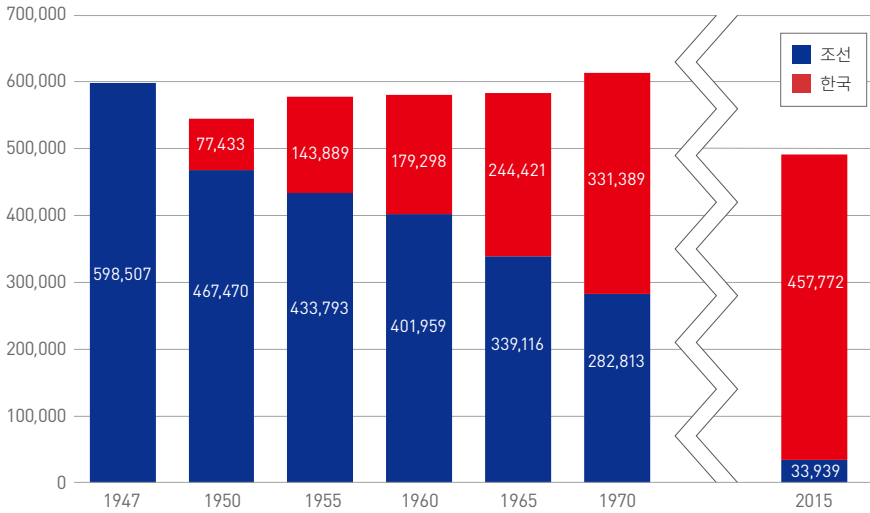
“
**일본 정부는 국적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기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 조련계 재일조선인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외국인등록의 국적란은 이후 일본 내 남북 대립의 무대가 되었다.**
”

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재일조선인 단체가 지지하는 정부도 두 개로 나뉘었다.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은 주일한국대표부와 함께 외국인등록의 국적란에 ‘한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이 요구를 거부했지만, GHQ/SCAP의 지시로 1950년 2월 이후부터는 등록 시 ‘한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단과 주일한국대표부의 요구 배경에는 재일조선인은 모두 한국 국민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희망자에 한해 ‘조선’에서 ‘한국’으로 외국인등록상의 국적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 결과 한국 국적으로 변경한 사람은 1950년 12월 말 현재 7만 7,433명으로 전체 조선인 등록자의 12.9%에 불과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적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기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 조련계(朝連系) 재일조선인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외국인등록의 국적란은 이후 일본 내 남북 대립의 무대가 되었다.

또한 ‘한국’이라고 기재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일본 정부의 국적 해석이 바뀐 것은 아니며, 국적 문제는 강화조약과 한일회담의 결정에 따르게 되었다. 일본 정부(외무성) 내에서는 강화조약 검토 초기에는 재일조

포커스 I



조선·한국적자의 추이(1947~2015)

출처: 鄭榮桓, 2022, 『歴史のなかの朝鮮籍』, 以文社

선인에게 국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조선 국적을 선택한 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퇴거명령권을 갖는다는 방안도 존재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9월경, 재일조선인 공산주의자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기피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의 주장에 따라 국적 선택권은 배제되고 전 조선인의 일본 국적 상실 방침이 굳어졌다. 반공주의가 조선인의 국적 선택권을 부정하는 데 작용한 것이다. 그 결과 재일조선인의 국적과 체류권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1951년 10월부터 시작된 한일예비회담에서 이루어졌다.

협의에서는 퇴거 강제 적용 등 체류권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양국은 국적에 대해서는 모든 조선인을 한국 국적으로 하는 데 일치했다.

포커스 I

외국인등록 국적도 ‘한국’으로 통일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사실 국적 선택권에 대해 한국 측에서 검토한 흔적이 있는데, 일본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던 것, 더 나아가 한국 병합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 때문에 한국 측에서도 국적 선택권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1952년 4월 1일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협정안’에서는 “대한민국은 재일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한다”(제2조 제1항)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재일조선인 국적 문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를 닷새 앞둔 1952년 4월 19일, 일본 법무부 민사국장은 “조선 및 대만은 조약 발효일로부터 일본 영토에서 분리되므로 이에 따라 조선인 및 대만인은 내지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하여 모두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고 통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인은 <외국인등록법>¹과 <출입국관리령>을 주축으로 하는 전후 일본의 외국인 법제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와 지문 날인의 의무가 부과되고, 입관령(入管令)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회보장이나 전쟁피해자 보상에서 배제되었다.

그렇다면 국적을 상실한 조선인은 어느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일까? 사

1 <외국인등록령>은 1952년 4월 28일에 폐지되어 같은 날에 이를 대체하는 법률인 <외국인등록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국적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조선통일민주동지회 기관지 『통일민보』(1952. 2. 22)

실 모든 재일조선인을 한국 국적으로 한다는 앞서 언급한 협정안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1차 한일회담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재류 자격 문제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일단 재류 자격 없이 재류를 허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여권도 사증도 없고 국적과 재류 자격도 애매한 조선인, 즉 일본 외국인 법제의 예외적인 존재가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강화조약 발효 이후에도 모든 재일조선인을 한국 국적으로 간주한다는 전제하에 외국인등록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 역시 큰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한국 국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재일조선인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은 당시

“
여권도 사증도 없고 국적과 재류 자격도 애매한 조선인,
즉 일본 외국인 법제의 예외적인 존재가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

‘강제추방 반대’를 내걸고 <출입국관리령>과 <외국인등록법> 적용에 반대하는 한편, 한국 국적 일률 부여는 ‘국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중립계인 조선통일민주동지회와 조선인상공회도 가세해 “재일조선인은 남북한 정부 어느 쪽의 국적도 강요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한국 국적의 일방적 부여는 “조국의 분열을 고착화시켜 민족의 멸망을 돕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에서도 사회당과 공산당이 외국인등록 시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적증명서가 필요한 것을 문제 삼았고, 결국 일본 정부도 편법으로 이전 국적 그대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마찬가지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 대만인의 경우, 재일화교단체가 등록상 국적이 ‘중국’과 ‘대만’으로 나뉘어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결과, 강화조약 발효 후 국적란 표기가 ‘중국’으로 통일되었다. 조선인의 등록상 국적만 ‘조선’과 ‘한국’으로 나뉜 채로 남게 된 것이다. 조선적이 당초 일시적인 출신지 표시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조약 발효 이후에도 일본 법제 안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5. 허공에 뜬 국적, 조선적

김영달은 재일조선인이 처한 법적 상황을 ‘이중으로 뒤틀린 변칙상태’라고 표현한 바 있다. 재일조선인의 조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어 있는 반면, 거주국인 일본은 한국 정부와만 편면적(片面的) 국교를 맺고 있다. 그래서 남북 분단의 결과로 재일조선인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화국 공민으로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이중으로 규정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국교의 결과로 일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이중으로 뒤틀린 변칙상태’는 한일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변함 없이 계속되고 있다. 재일조선인의 재류권 문제는 1965년 한일법적지위협정에 따라 한국 국적자에게 협정영주 부여, 1982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조선 국적자에게 협정영주 부여, 그리고 1991년 <입관특례법>에 의한 특별영주로의 일원화라는 형태로 일단 해결을 향해 나아갔다(단, 영주 자격의 대상은 일본 패전 이전부터 계속 일본에 거주한 자 및 그 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 도항자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적자의 국적 문제는 현재도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조선적자의 수는 2024년 6월 말일 현재 2만 3,756명까지 감소했다. 조선적자가 이 불안정한 국적에 굳이 머물러 있는 것은 왜일까? 언뜻 보면 족쇄로 보이는 이 조선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단 상황의 격랑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달’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남북 분단이 ‘통일조선국민’이라는 정체성 실현을 가로막고, 편면적 국교가 ‘재일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각자의 나라를 그

포커스 I

리며 이 허공에 떠 있는 ‘국적’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필요한 질문은 왜 답을 올리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격랑을 가라앉힐 것인가가 아닐까. 그것은 바로 식민주의의 유산과 분단을 극복하고 그 너머에 어떤 나라를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참고문헌

- 金英達, 1992, 『双書在日韓国・朝鮮人の法律問題(1) 日朝国交樹立と在日朝鮮人の国籍』, 明石書店.
- 다나카 히로시·나카무라 일성 저, 김윤형 역, 2023, 『공생을 향하여-자이니치와 함께 걸어온 반세기』, 생각의힘.
- 松本邦彦, 1988, 「在日朝鮮人の日本国籍剥奪 日本政府による平和条約対策研究の検討」, 『法学』 52-4.
- 정영환·임경화 역, 2019,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독립’으로 가는 험난한 길』, 푸른역사.
- 鄭榮桓, 2022, 『歴史のなかの朝鮮籍』, 以文社.



정영환(鄭榮桓, Chong, Young-hwan)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양교수센터 교수

1980년 일본 지바현에서 태어났으며 재일조선인 3세대.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사회학박사).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학 교양교육센터 교수다. 전공은 역사학, 조선근현대사, 재일조선인사다. 저서로는 『歴史のなかの朝鮮籍』(以文社, 2022),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독립’으로 가는 험난한 길』(푸른역사, 2019),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푸른역사, 2016) 등이 있다.

미얀마 군부, 땃마도는 여전히 국가 수호자인가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교수

1. 국가와 국민의 땃마도: 혁명군부로서 국가의 수호자

미얀마 정규군은 현지어로 땃마도(Tatmadaw), 즉 소규모 부대의 조합인 ‘땃마(Tatma)’와 국가, 국기, 불탑, 스승 등 신성함과 경외 대상인 ‘도(Daw)’의 합성어로서, 그 기원은 영국 식민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자적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대 미얀마 민족주의자들은 외부 세력과 연대,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승장구하는 일본을 눈여겨보았다. 일본도 미얀마를 교두보로 중국을 점령하고자 했으니 두 국가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다.

1940년 10월 아웅산(Aung San)과 스즈키 게이이치(鈴木敬司)는 중국 샤먼(廈門)에서 만나 서로의 뜻을 확인했다. 본국으로 돌아간 아웅산은 이듬해 ‘30인의 동지’를 결성하고, 이들과 함께 일



1942년 영국을 몰아내고 양곤으로 입성한 버마독립군

출처: www.wikiwand.com/en/articles/Burma_Independence_Army

본 군대의 지도로 하이난섬(海南島)과 타이완 위리(玉里)에서 군사훈련을 했다. 1941년 12월 방콕에 집결한 미얀마 출신 군인들은 버마독립군(BIA)을 창설함으로써 땃마도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땃마도는 지난 50년간 이어진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하는 근대적 독립기구이자 미얀마 점령(1942~1945)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일본을 향한 저항기구였다. 그리고 세속주의를 원칙으로 구질서를 타파하고 근대 미얀마를 창출했던 혁명기구였다. 즉 땃마도는 독립의 주역이자 근대국가의 깃발을 든 기수였다. 땃마도는 독립을 고대하던 당대 민족주의자들이 해낸 노력의 결과였지만, 아웅산의 행적과 사상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현재까지 땃마도의 근간과 정신을 이룬다. ‘국민과 국가의 땃마도’가 바로 그것이다.

“

땃마도는 독립의 주역이자 근대국가의 깃발을 든 기수였다.
1960년 총선을 앞두고 군부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키며 병영으로 복귀했고,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군부, 즉 땃마도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혁명기구의 면모를 유지했다.

”

독립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아웅산이 사망하자 땃마도는 사분오열했다. 독립 정부의 근대 축소안에 따라 정규군에서 강제 전역한 군인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좌파 성향의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며 반정부 투쟁에 돌입했고, 소수종족이 지도부를 구성한 식민시기 편제는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어 군대 내 종족 간 갈등이 상존했다. 그뿐만 아니라 카렌족(Karen)을 필두로 한 소수종족의 분리주의 투쟁, 동북부 지역으로 패퇴한 중국국민당이 미얀마 국경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등 독립 1년 만에 미얀마는 내전에 휩싸였다. 당시 미얀마는 ‘랑군(Rangoon) 정부’로 불렸다.

연방의 위기 속에서도 군부는 민간통제의 원칙을 수용했고, 소수종족이 지휘하는 군 수뇌부도 별다른 동요가 없었다. 독립운동 당시 군 배경이 없었던 우 누(U Nu) 총리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군 수뇌부가 제안한 군의 근대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곳곳의 반군을 소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다. 당시 군부는 국내 문제보다 공산주의 확산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교리(敎理)를 설정함으로써 내전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1958년, 우 누는 2년 뒤 총선을 의식해 공산당원을 포함한 불순분자를

포커스 I

사면 및 복권하고 소수종족에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선심성 발언을 했으며, 측근을 통해 ‘인민의 1호 적’이 바로 땃마도라고 자극했다. 그러자 군 수뇌부는 두 차례에 걸쳐 우 누 총리와 회동하고 군부에 정권 이양을 합의했다. 독립 후 10년 만에 미얀마는 민간통치에서 군부통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를 쿠데타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정 운영에 부담과 한계를 느낀 우 누 총리가 자의적으로 정권을 이양한 것인지, 군 수뇌부의 인신 위협에 굴복한 것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는 현지어로 씯아나떼잉어쏘야(sit-ana-thein-a-soe-ya)로 정의하지만, 이 시기 정권은 과도적 성향이 짙어선지 ‘집(국가)을 지키는 정부’라는 의미로 ऐ잉싸웅어쏘야(einsaun-a-soe-ya), 또는 군인이 집권한 차원에서 보족어쏘야(bo-gyouk-a-soe-ya)로 불렸다.

1958년 10월 28일부터 18개월간 군부는 미얀마를 새로운 국가로 변모시켰다. 국가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각 지역사령부는 반군을 비롯한 반정부 세력을 척결함으로써 치안을 확보했고, 군 수뇌부도 독립에 공을 올린 버마족(Burman)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1960년 총선을 앞두고 군부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키며 병영으로 복귀했고, 군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그간 무기력하고 무능한 민간정부와 비견할 수준이 아니었다.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군부, 즉 땃마도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혁명기구의 면모를 유지했다.

2. ‘아웅산 정신’ 계승을 빙자한 1세대 군부: 내부식민지 통치

1962년 3월 2일 새벽, 네윈(Ne Win)을 위시한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

포커스 I

고 헌정 질서를 중단했다. 1960년 총선 승리로 복귀한 우 누 총리가 주장한 소수종족의 자치권 보장이 결국 연방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군부는 동쪽에서는 베트남이 양분되어 상잔(相殘)의 비극이 발생했고, 동남아 지하 곳곳에서 준동하는 공산당도 연방의 존립에 위해가 된다고 믿었다. 이제 군부는 그들 스스로 깨딩신(Keidinsin), 즉 수호자로 명명하고, 그들만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맞닥뜨린 조국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식했다. 그래서 군부의 정권 이양은 국가 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정치적 행위였다. 7월 7일, 양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있기 전까지 국민은 동요하지 않았다. 1958년처럼 군부는 상황이 안정되면 병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불교에 심취하여 정치와 끊임없는 교류를 추구했던 우 누 총리와 달리 스스로 세속주의자라는 네윈은 아웅산이 못다 이룬 사회주의를 건설할 유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군이 정부와 정당 위에 군림하고, 그 최상위에 자신이 위치하는 권력 구조를 완성했다. 정치적 이념은 제3의 길인 ‘버마식사회주의(Burmese Way to Socialism)’였다. 제1세계와 제2세계에 대한 염세주의와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제3세계의 보편적 현상을 조합한 미얀마만의 국가 구조와 이념은 한때 그 결과가 기대되는 대안적 발전모델의 실험으로 주목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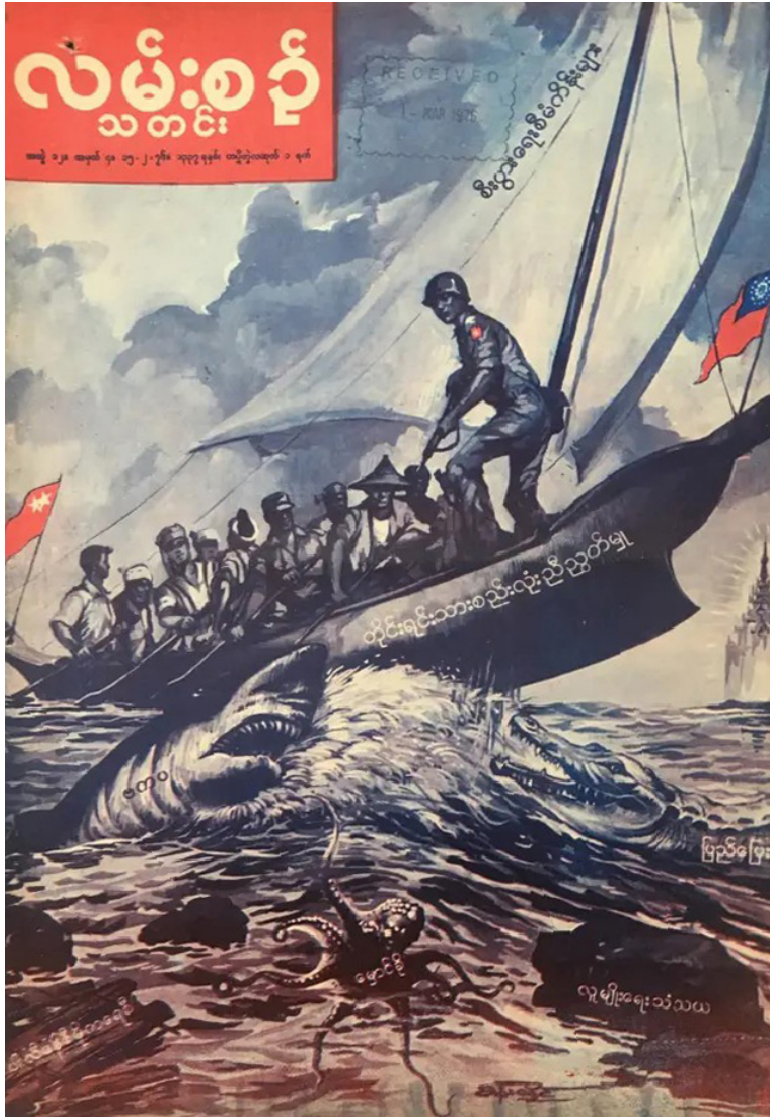
네윈의 포부와 구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미얀마가 다종족 국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인구의 70%인 버마족이 30%의 소수종족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내부식민지 통치방식을 구현했다. 이에 근거하여 1965년 군부는 그들의 교리를 ‘내전’으로 정했다.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소수종족의 다수는 기독교나 서양의 문자를 수용했고, 무엇보다 왕조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종족적 정체성(ethnicity)을 터득했다. 카렌족과

“
네원을 위시한 군부는 소수를 포용하는 국민국가 건설보다
이들을 적으로 간주함으로써 군부의 정치적 역할을 부각시켰다.
”

같은 일부 소수종족은 연방에서 분리를 시도할 정도로 독립 후 미얀마는 국민국가(nation state) 건설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연방 탈퇴를 시도하는 소수종족의 ‘불순한 의도’가 쿠데타의 결정 요인이 되었듯이 군부는 ‘애국심’에 근거하여 연방의 분열을 우려했다.

이제 네원을 위시한 군부는 소수를 포용하는 국민국가 건설보다 이들을 적으로 간주함으로써 군부의 정치적 역할을 부각시켰다. 군부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깨덩신이므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개발처럼 자신들이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에 몰입할 필요가 없었다. 예컨대, 1970년대 중반 시장 개방을 통해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이 달성되자 네원은 사회주의 이념과 정책에 어긋난다면 더욱 폐쇄적이고 보수화되었다. 자력갱생의 사회주의는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우민화 속도는 빨라졌다. 결국 양곤 시민은 변방의 소수종족을 타인처럼 대했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소수종족은 국어인 미얀마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70년대 이후부터 로힝자족(Rohingya)은 국내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무슬림 이방인이 되었다.

이처럼 군부의 내부식민지화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군부 입장에서는 국론 분열을 방지한다는 매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으로 그들의 장기집권을 공고화했다. 사회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은 군대처럼 운영되었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사 표현과 의견 개진은 상명하복이 일상



‘경제계획’이라는 뜻을 달고 ‘국민통합’이라는 어선을 엄호하는 군인과 노를 젓는 국민 바다에는 버마공산당(상어), 해외망명자(악어), 암거래상(문어), 의회민주주의(나무조각), 인민 간 불신(불상) 등 사회주의 정부가 경계하고 퇴치해야 하는 대상이 즐비하다.

출처: teacircleoxford.com/research-report/delving-into-socialist-burma-in-the-menzius-library

포커스 I

화하고 경직된 사회구조에 함몰되었다. 또한, 군부정권은 형식적으로 군사평의회를 통한 집단지도체제였으나 실제로는 한 명의 독재자(caudillo)가 권력을 독점했다. 독재자는 사유화한 권력을 지키는 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으며 역모를 피할 군대 내 사조직도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었다.

네원이 권좌에 머무른 26년간 군부통치의 결과는 암울했다. 연방에서 분리를 추구하는 소수종족무장단체(Ethnic Armed Organization)의 수는 더 늘었고, 국어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소수종족이 늘어날 정도로 국민 간 이질감은 커졌다. 풍요롭게 고등교육을 받았던 기성세대는 1987년 미얀마가 유엔 최빈국(LDC)에 지정되었을 때 한없는 수치심을 느꼈다. 1988년 군부통치의 종식을 요구한 전국적 시위가 발생했을 때 거리의 시위대는 민주주의를 모르면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고, 철 지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경도된 학생들은 혁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소수종족은 버마족과 함께 군부에 투쟁하기보다 그들의 점령지를 넓히거나 자원을 확보하는 데 몰두했다. 미얀마는 시간이 멈춰버린 나라가 되었다.

3. 통치 자체가 목적인 2세대 군부: 이익집단으로의 변화

1988년 9월 18일, 친위쿠데타로 집권한 2세대 군부는 그들의 선배가 추진한 사회주의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세대 군 수뇌부는 독립운동 경험과 무관하고, 국가의 근대화와 같은 군 고유의 역할 이외 기능도 학습하지 못했다. 다만, 미국 일극체제로 재편한 국제질서와 이로 인한 외부의 압력 속에서 군부는 '생존'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 국내적으로 군부는 1990년 5월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정권 이양을 거부했다. 군부의

“

2세대 군부는 혁명군부를 포기하고 이익집단으로 변화한다.
즉 그들은 항구적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통치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인식으로는 자신들에게 반기를 드는 국민은 모두 연방의 위기와 분열을 부추기는 자들이었고, 자신들만이 위기를 수습할 유일한 존재였다.

2세대 군부는 혁명군부를 포기하고 이익집단으로 변화한다. 즉 그들은 항구적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통치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팻마도의 충성심과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팻마도가 어떤 사회집단보다 월등한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근대식 무기를 도입하고 군 엘리트를 교육하는 등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했다. 나아가 서방세계의 포괄적 제재와 같은 전례 없던 외압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넉넉한 자금은 필수였다.

이에 군부는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고, 천연자원과 생필품을 전담하는 군 기업을 설립했으며, 고위 군 인사도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1992년부터 군사평의회 의장으로 등극한 탄쉐(Than Shwe) 장군부터 현재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사평의회 의장까지 그들의 족벌이 모두 재계 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또한, 팻마도는 소수종족 무장단체와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넘나들며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군부로서는 소수종족 무장단체의 척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소탕하면 자신들이 정치권에 남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

1988년 이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군부는 전국 주요 도시에 다양한 종족과 직업군이 평화로운 연방을 완성해야 한다는 동상을 제막했다. 그 중심에는 항상 군부가 자리한다.

출처: 필자 촬영

도 군부는 자신들에 비협조적인 소수종족에 대해서는 내부식민지적 시각을 버리지 않았다. 군부는 변방에서 울리는 총성을 언론의 한가운데에 전시하며 그들이 연방을 지키는 장본인이라고 선전했다.

고위 군 인사와 이해관계를 맺거나 군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하며 신뢰를 쌓은 정실(情實)기업도 등장했다. 이들은 수도 네피도 개발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군부를 대신하여 제재 품목을 대리 구매하는 등 군부의 보조 역할을 한다. 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 군이 주축을 이루는 현지 기업이 제공하는 토지와 정보는 훌륭한 합작사업

의 근간이 되었고, 이로 인해 미얀마는 1990년대 말 서방의 제재가 강화 되기 전까지 신흥시장으로 각광을 받았다.

2010년 전까지 매년 군부는 교량, 도로, 댐 등 건설한 기간시설의 수를 발표하고 ‘근대적이고 발전하는 국가’는 오로지 자신들의 손으로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군부는 자신들의 업적을 시장경제나 자본주의의 수용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창한 개방경제의 성과라고 본다. 국가가 시장을 견인한 동아시아의 발전 사례와 같은 발전국가론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외부의 유행을 추종하거나 수용하는데 인색했던 1세대의 전철을 따랐다. 그들만의 것이 독창적이고 훌륭하며 그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1988~2011년까지 2세대 군부는 자신들의 기준에서 반국가 세력, 즉 소수종족 무장단체와 반체제 인사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주체로 그 기능을 확장했다. 경제활동은 국민에게 물질적 혜택과 복지를 배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을 누리기 위한 도구를 확보하는 필수 과업이었다. ‘국가 안의 국가’로서 군부와 자신들의 가족만이 물질적 안위를 추구하고, 확보한 자금이 있기에 운명공동체로서 군부는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찼다. 경제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필요로 하는 군부는 이미 국가의 약탈자로 변질했다.

4. 시대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3세대 군부: 특권을 쥔 이익단체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 민간정부 5년은 군부의 실험기였다. 예를 들면 정부는 군부의 과오를 청산할 것인지, 군부의 특권(perogative)을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법으로 폐지할 것인지, 궁극적으로 민-군 관계는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가 세간의 관심이었다. 여당인 국민민주주의연합(NLD)과 정부는 2008년 제정한 헌법, 특히 군부의 정치적 특권을 폐지하는데 주력했다. 결론적으로 군부에 대한 사회적 처벌에 부응할 수준으로 민간 우위의 제도적 원칙을 마련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군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한 정도가 최대 치적이었을 뿐 군 개인기업을 개혁할 근거는 없었으며, 군부의 동의를 없는 개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군부로서 잃은 것은 별로 없지만, 민간정부가 지속될 경우 그들이 가진 특권에 대한 포기 압력이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의 입지도 흔들리며 머지않아 과거사 청산도 논의 대상일 것이 자명했다. 국민은 군부,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정실기업이 경제를 장악한 현실을 못마땅해했고, 군부가 없는 순수한 민간정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 설령 민간정부가 좌충우돌, 시행착오 속에서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군부가 통치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군부가 산업화의 최전선에 서더라도 이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크지 않을 상황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군부는 과거를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을 쟁취한 독립군의 계보를 잇고, 연방을 분열시키려는 세력과 악전고투해 온 '진정한 애국자'라는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 저항하는 국민은 언제든지 억압하고 통제할 자신감이 넘쳐났다.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고착화한 대립과 갈등적인 사회는 자신들에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군부는 쿠데타 뒤 1~2개월 내 주요 도시를 장악하고 소수종족 무장단체가 연방의 와해를 꾀한다는 날조된 서사를 바탕으로 그들과 간헐적인 교전을 통해 권력을 접수하고 통치해 온 전 세대의 전철을 따르기로 했다.

“

군부는 과거를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을 쟁취한 독립군의 계보를 잇고, 연방을 분열시키려는 세력과 악전고투해 온 ‘진정한 애국자’라는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 저항하는 국민은 언제든 억압하고 통제할 자신감이 넘쳐났다.

”

그러나 상황은 변해 있었다. 소수종족을 포함한 연방 구성원은 지난 10년간 자유화의 시기를 경험했고, 군부의 내부식민지 통치방식에 환멸을 느꼈다.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는 미얀마의 미래를 가로막는다는 것이 국민이 내린 명확한 결론이었다. 일부 소수종족 무장단체는 이기적 행태를 반성하고 민주진영이 조직한 군대와 연합했다. 평화적 시위와 구호, 국제사회에 호소하던 정치적 탄원을 벗어나 군사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반군부 진영의 무장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무장투쟁 초기 반군부 진영의 장래는 어두웠다. 약 40만 명에 달하는 땃마도 병력, 압도적 무기, 장기간 군사활동으로 체득한 군사기술, 전술, 전략 등 모든 군력(軍力) 면에서 열세였다. 그러나 땃마도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설 이후 현재까지 땃마도는 대규모 전투보다 특정 무장단체와 치른 국지전 또는 게릴라전 경험이 전부였고, 1988년 이래 지역사령부 소속 땃마도는 경제활동에 전념했다. 쿠데타 4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땃마도는 지속적인 교전 패배, 이로 인한 사기 저하와 탈영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군 수뇌부의 불만도 가중되었다. 철웅성과 같은 14개 지역사령부 중 2개가 무장단체에 의해 함락되었고, 10개 지역사령부도 전장의



“땃마도에게 힘이 있어야 국가도 힘이 있다”

쿠데타 이후에도 군부는 그들을 중심으로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선전한다.

출처: www.newmandala.org/the-end-of-tatmadaw-rhetoric

최전선에 있다. 이제 땃마도의 응집력은 ‘국가와 국민의 군대’라는 창설 정신에 의해 강요되지만, 미래가 불투명하다.

민간정부 5년을 겪으면서 군부는 자신들이 가진 특권에 약간의 상처도 용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헌신하는 집단이 아닌 이들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며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고자 한 텅천(撐天)한 오욕은 국민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땃마도는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군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선전물이다.

출처: www.flickr.com/photos/immumu/101532660

5. 맺음말: 위기에 몰린 군부의 미래

땃마도는 미얀마의 어떤 단체보다 가장 근대적이고 응집력이 강한 엘리트주의를 표방한다. 국제사회에서 은둔의 시간을 보낼 때도 땃마도만큼은 발전주의의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다. 그러나 땃마도의 오만과 사회를 바라보는 날조된 편견은 오늘날 위기를 자초한 근원이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기보다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창군 동기를 유명무실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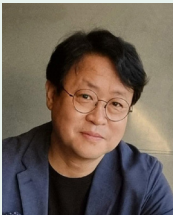
2025년, 땃마도는 상반된 두 길과 마주할 것이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총선 실시와 지속적 교전 패배로 인한 군부의 몰락 또는 군의 자발적

포커스 I

붕괴가 그것이다. 반군부 진영의 상황을 고려할 때 후자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총선 이후 군부가 지분을 차지하는 민간정부의 장래도 밝지 않다. 국민의 인내심은 땃마도의 단결력보다 강하고, 우여곡절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긍정적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은 세뇌된 땃마도의 강령보다 우월하다.

아웅산은 ‘국가와 국민의 군대’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군대, 국민이 존경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만일 군대가 국민의 미움을 산다면, 군대 창설의 목적은 수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장준영(張准榮, Jang, Jun-young)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국제관계학박사를 받았고, 동남아시아 정치와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가르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 동 대학 인도연구소 HK연구교수 등을 지냈으며, 법무부 난민심의과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커스 II

식민지 유산의 발현

반공주의라는 식민지 유산

이봉규 와세다대학 국제학술원 국제교양학부 조교수

일본 외무성 코리아스쿨의 탄생

박경민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저항운동 공간에서 냉전의 변방이 된 북강원도

현명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반공주의라는 식민지 유산

이봉규 와세다대학 국제학술원 국제교양학부 조교수

1. 반공주의는 현대사의 전유물?

흔히 한국인에게 반공주의란 해방 이후 격렬했던 이념 갈등과 잇따른 피해 그리고 한국 현대사 내내 발생했던 각종 공안사건과 관계된 무언가 일 것이다. 1940년대 중후반 세계사적으로 성립된 ‘냉전(cold war)’과 더불어 한국전쟁으로 집약된 한국의 ‘열전(hot war)’이 반공주의를 전 사회적으로 확장시킨 계기였다는 점도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러한 상식으로 말미암아 반공주의는 그 자체가 한국 현대사에 고유한 것처럼 치부되기 쉽다. 그런데 반공주의를 비롯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수놓았던 여러 개념은 어느 순간 갑자기 불꽃을 피운 게 아니다. 용어나 개념 또한 시간과 공간의 영향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1920년을 전후해 조선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

식민지 관료들은 당시 식민지 행정 경험을 토대로
식민-해방-분단의 시간, 나아가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반공(주의)'적 행정 경험과 관행을 매개한 주요 주체였다.

”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 함께 민족해방운동의 양대 사상 축이었다. 신간 회로 대표되는 좌우합작운동은 두 사상이 운동의 형태로 결합해 조선 해방을 모색한 것이었다. 물론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을 비롯한 국제 사회주의운동의 영향 속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연대할 것인가 대결할 것인가를 놓고 시기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1920년대 이래 사회주의 세력은 민족적 관점과 태도에 기초해 식민지배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외면하지는 않았다. 민족해방운동 이념으로서 사회주의는 민족주의를 대적하기에 앞서 공존할 수밖에 없었다. 제국 일본의 입장에서 불온하기 이를 데 없는 이들 사상을 저지하기 위해 반공주의는 <치안유지법>으로 법적,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반공주의가 해방 이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한반도에 흐르고 있었다면,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였을까?

2. 반공주의라는 식민지 행정 경험

식민지 관료들이야말로 한반도 내 사회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식민지 공간에서 반공주의를 다루었던 이들이었다. 식민지배 때문에 근대적 의미에서 행정 관료로 성장하고 경험한 이들이 극소수였던 점을 생각해볼

때, 이들 식민지 관료들은 당시 식민지 행정 경험을 토대로 식민-해방-분단의 시간, 나아가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반공(주의)’적 행정 경험과 관행을 매개한 주요 주체였다.

식민지시기 경찰로 재직한 조선인의 80% 정도가 미군정 당시에도 그 일을 계속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해방 이전 박천경찰서장에 재임했던 이익흥(李益興)은 해방 이후 제1관구경찰청장, 서울헌병대장, 서울경찰국장, 내무부 치안국장, 경기도지사, 내무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조선총독부 내무국 지방과, 평북 경찰부 보안과장 등을 역임한 전봉덕(田鳳德)은 해방 후 미군정청 경무국장, 경무부 공안국 공안과장, 헌병사령관 등을 지냈다. 해방 전 해주경찰서 사법계 주임, 송화경찰서장을 지냈던 윤우경(尹宇景)은 영등포 경찰서장, 수도경찰청 총무과장, 서울시 경찰국장, 내무부 치안국장 등을 역임했다.¹ 이들 상당수는 식민지 행정 이력을 배경 삼아 해방 이후에도 고위직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식민지 당시에 익힌 행정 관행을 해방 이후 한국에 뿌리내리는 데 관계했음은 물론이다.

이들 일부가 남긴 회고록을 통해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윤우경은 조선인인 자신이 받는 차별과 천대가 불만스러웠다. 관계(官界)에 나아가 입신양명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와 본인의 포부에 따라 경찰이 되었다. 그는 1943년 당시 해주경찰서 고등계에 일본 유학생 28명이 검거된, 이른바 ‘녹의대’ 사건을 회고하였다.² 전도유망한 조선인 유학생들

1 이봉규, 2018, 「서북출신 엘리트의 해방 후 남한 관료 진출」, 『學林』 42, 연세사 학연구회. 이하 윤우경, 홍순봉의 식민지 관료 및 해방 후 활동 등은 이 논문에 기초하였다.

2 尹宇景, 1992, 「녹의대(綠衣隊) 사건」, 『晚省錄: 단 한번 잠시 느껴본 행복감』, 도서출판 서울프레스.

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녹의대란 비밀단체를 조직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그는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중추원 참의 최윤주(崔允周)로부터 녹의대 주모자로 지목, 검거된 아들의 석방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여기에는 최윤주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그의 아들이 최윤주가 갖고 있었던 『대동아건설요강』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최윤주는 일전에 이 요강을 관동군사령관을 역임했고 사건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로부터 비밀리에 건네받았는데, 여기에 담긴 일제의 대륙침략 및 조선의 분할 독립 계획에 영향을 받아 아들이 녹의대를 조직한 것 같이라며 염려하고 있었다. 최윤주는 아들이 독립운동에 연루된 것도 걱정스러웠고, 심문 과정에서 이 요강의 실체와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질까봐 마음을 졸였던 것이다.

윤우경은 조선을 일본 제멋대로 분할하려는 내용을 담은 『대동아건설요강』을 읽고 격분했다고 회고했다. 그렇다고 이 요강을 조선 사회에 알릴 정도로 격분한 것은 아니었다. 소련이나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 내용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만큼 그는 충직한 식민지 관료였다. 단지 그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애썼다.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녹의대를 조직했다는 진술서를 다시 꾸며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다. 진술서 요지를 보자.

녹의대를 조직한 사실은 있으나 그 조직의 목적은 일본에 유학하는 우리 조선인 학생 중에 공산당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익단체로 “녹의대”를 조직하고 동지를 널리 규합 중에 있었을 뿐이었다.

“

전시체제기에 고통받았던 다수 조선인들과 유리된 윤우경의 행보 속에,
식민지기에 획득한 행정 경험이자 정치적으로도 고려할 줄 아는
그의 행정 기술은 해방 후 ‘자산’이 된다.

”

이와 같이 윤우경은 녹의대 조직 목적을 반공주의적 견지로 둔갑시켰다. 녹의대의 성격을 독립운동이 아니라 반공우익활동으로 재규정한 이 일화는 중추원 참의 최윤주를 돕고, 제국 일본의 대륙팽창 의중을 효과적으로 숨겼다는 점에서 그의 표현대로 “정치적” 해결에 걸맞은 것이었다. 식민지 관료로서 자신의 ‘국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 그 역량은 반공과 우익을 결합시켰던 식민지 행정 경험과 함께 움뒀다. 그에게는 회고로 남길 법한 성과였던 게 분명하다.

윤우경이 녹의대 건을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한 덕에 최윤주의 아들은 풀려났다. 이들과 윤우경의 인연은 해방 후에도 이어졌다. 반민족 행위처벌법 제정에 따라 최윤주가 반민특위에 구속되었을 당시 서울시 경찰국 경무과장이었던 윤우경은 그의 아들과 재회한다. 최윤주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아들과 청년들이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반민특위 조사관이 찾아와 녹의대 건의 경위를 윤우경에게 물은 후 최윤주는 곧 석방되었다. 최윤주가 중추원 참의 출신의 명백한 친일협력자가 아니라 반공우익활동 조직을 지시한 애국자인양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식민지 행정 경험의 후과가 해방 이후에 거둬지는 것은 이렇게 식민지 반공주의의 유산과 무관하지 않았다.

전시체제기에 고통받았던 다수 조선인들과 유리된 윤우경의 행보 속

에, 식민지기에 획득한 행정 경험이자 정치적으로도 고려할 줄 아는 그의 행정 기술은 해방 후 ‘자산’이 된다. 그는 국민방위군사건 당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신성모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진언’했다. 일단 사건 주도자들에게 장기형을 언도했다가 추후 정상참작하는 방식으로 민심을 달래자고 말이다. 그는 국민방위군사건 재수사에서도 정치인, 장성 등이 저지른 부정을 그대로 조서에 담는 게 곤란하다 여겼다. 국가적 수치이기에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재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3. 해방 후 재생된 ‘진압의 추억’

1898년 평남 대동에서 태어난 홍순봉(洪淳鳳)은 1921년 평양경찰서 순사시험에 합격했다. 만주사변 당시에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한 조선혁명군의 국내진압작전을 저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1935년 만주국 정부로부터 건국공로장을 받았다. 나아가 관동군 일원이었던 만주국 경찰행정관으로 초빙되었고, 1939년에는 사무관 겸 경정으로 승급했다. 그는 간도의용자위단 조직에 관여하여 동북항일연군의 무장독립투쟁 저지에 나섰다.

간도의용자위단 결성은 관동군의 만주 치안대책 일환이었다. 무력토벌을 핵심으로 하는 지표공작(置標工作)만으로는 정치·사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일제의 진단 속에 갖가지 방법들이 고안, 시행되고 있었다. 그는 지표공작과 치본공작(置本工作), 선무공작(宣撫工作: 사상공작)으로 구성된 일제의 토벌작전을 익히고 활용했다. 주민 강제이주를 통한 무주지대 설정, 비민(匪民) 분리, 집단부락 건설, 주민통제 및 상호감시를 위한 보갑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공산주의 및 반만항일(反滿抗日)사상 확산을

“

당시 일제가 주목하고 확산한 ‘방공(防共)’은
단지 반공주의의 당대적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행정 관행으로도 경험되고 학습되었다.

”

저지하려는 사상공작(선무공작) 또한 홍순봉이 익힌 식민지 관료 경험에 포함됐다. 당시 일제가 주목하고 확산한 ‘방공(防共)’은 단지 반공주의의 당대적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행정 관행으로도 경험되고 학습되었다.

해방 이후 그의 식민지 관료 경험은 제주 4·3사건 진압에 토대가 되었다.

… 당시 경무부장인 조병옥 박사께서 나에게 제주도 4·3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진압책을 수립해 보라고 직접 하명이 계셨다. 나는 과거 만주 지방에서의 공비 소탕작전에 관하여 약간의 체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하여 치표공작이나 지하공작이나 하여 공비 진압 대책을 입안하여 공안국장을 통하여 부장에게 제출 하였던바 조 부장께서는 이것은 중요한 요건이니 만큼 부 내 국과장회의에 부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국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나에게 그 안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지시였으므로 나는 내가 입안한 공비 진압 근본대책 방안의 내용을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였던바 만장일치 무경정으로 통과되었다.³ (밑줄은 필자)

3 홍순봉, 1976, 『나의 생애』, 西江, 101쪽.

이와 같이 홍순봉은 1948년 제주 4·3사건 당시 조병옥의 명령에 따라 「4·3폭동사건 이후의 제주도 치안 대책안」을 기안했고, 이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또 그는 5월 직접 제주도에 내려가 강경진압에 착수했다. 당시 함께한 김정호 공안국장 겸 제주비상경비사령관, 문용채 제주경찰서장은 만주국 중앙육군훈련처 출신이었다. 제주경찰감찰청에 근무한 고병익(高秉億) 또한 관동군 신경현병대에서 근무한 경험을 활용하여 집단 부락 건설, 보감제 실시, 귀순자단체 조직 등의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⁴ 1948년 10월 6일자로 제주경찰감찰청장에 임명된 홍순봉의 제주 4·3사건 강경진압책은 이러한 내용에 기초했다. 만주에서 일제로부터 익힌 소위 ‘공비(共匪)’ 소탕의 행정 경험, 즉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진압했던 행정 경험은 해방 이후 재생되었던 것이다.

4. 시공간을 넘나드는 반공주의 성찰이 필요하다

무수한 한국 현대사 연구를 통해 알려진 대로 반공주의는 이승만 정권이 추구하는 국민 만들기의 핵심논리였다.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호의적인 이들을 대한민국 주변과 경계 밖에 배치하고자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위하여 정적은 물론, 심지어 이념과 무관한 이들에게도 ‘빨갱이’란 잣대를 활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관료 출신들의 행정 경험은 내용이 빈약하기 그지없

4 고병익, 1948, 「제주도사태 수습에 관한 사건」, 『민주경찰』 2-5, 경무부 교육국, 49~52쪽(양봉철, 2017, 「홍순봉과 제주 4·3」, 『4·3과 역사』 17, 제주4·3연구소, 57~60쪽에서 재인용).

“

식민과 냉전을 가로지르면서도 국민국가 경계를 넘나들며
유동하는 개념으로 역사적 반공주의를 바라볼 때,
식민지 행정 경험 속 반공주의는 아시아 공동의 성찰 대상이자
반면교사의 기초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

는 반공주의를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반공주의는 부실한 내용만으로도 문제였지만 ‘빨갱이’란 호명과 낙인을 활용해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렇게 이루어진 식민지 행정 관행으로서 반공주의는 이승만 정권뿐 아니라 박정희 정권 시기에도, 또 그 이후에도 ‘용공’, ‘승공’과 같이 다기(多岐)한 이름과 함께 살아남았다. 법과 제도에서, 권력자의 입에서 못사람의 입으로 옮겨붙은 반공의 낙인은 거듭되고 있다.

이러한 일은 비단 한국에서만 발생했던 게 아니었다. 이념 갈등 속에서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 친화적인 이들을 부각시키며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의 국민 만들기는 일본, 타이완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더러 포착되는 현상이기도 하다.⁵ 식민지 행정 경험으로부터 낙착되고 재생하여 변형된 한국의 반공주의와 유사하면서도 각기 다른 복수의 반공주의가 아시아의 국가 형성 및 국민 만들기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들 복수의 반공주

5 Hajimu Masuda, “The Cold War as Social Mechanism: Toward an Analysis of Cold War Asia, not of the Cold War in Asia,” *IAS Newsletter* 72, October 2015.

포커스 II

의를 단지 냉전의 산물로만, 동북아시아 현대사에 고유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20세기에 걸쳐 다기하게 축적된 반공주의 경험의 여기에도 녹여져 있지 않을까? 식민과 냉전을 가로지르면서도 국민국가 경계를 넘나들며 유동하는 개념으로 역사적 반공주의를 바라볼 때, 식민지 행정 경험 속 반공주의는 아시아 공동의 성찰 대상이자 반면교사의 기초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봉규(李奉奎, Lee, Bong-kyu)

와세다대학 국제학술원 국제교양학부 조교수

「1960년대 한국 사회과학계의 인간 관리·개발 담론」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 현대사의 지배 담론과 사상, 사회과학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행정학 연구와 관리(management)론」, 「1960년대 중후반 사회과학의 '한국화' 담론의 등장과 전통의 재인식」, 「1960년대 정범모의 교육학 연구와 발전적 인간론」 등의 논문이 있다.

일본 외무성 코리아스쿨의 탄생

박경민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2025년에도 국내외 조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그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최악과 최선이라는 평가로 엇갈린다. 이 때문인지 해방 이후 한일관계의 유산을 단조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에 익숙하다면 이 글을 읽고 나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관심 밖에 있었던 일본 외무성 코리아스쿨(Korea school)의 탄생을 다룸으로써 식민지 유산을 사뭇 다르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코리아 뒤에 붙은 ‘스쿨(school)’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 요새 K-콘텐츠의 위력을 은근히 두려워한 외무성이 한국어 교실을 차린 게 아닌지 유추해 볼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이는 절반만 정답이다. ‘스쿨’에 대한 외무성의 공식 설명은 없으나,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의원이 아

* 이 글은 박경민, 2022, 「마에다 도시카즈(前田利一)의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외무성 관료로의 궤적: 코리아스쿨의 탄생과 함의」, 『아세아연구』 65-2 (통권 188)를 발췌, 축약한 것이다.



마에다 도시카즈(前田利一)

출처: 교도통신

베(安倍) 내각에 보낸 「외무성에서 스쿨의 폐해에 관한 질문 주의서(外務省におけるスクールの弊害に関する質問主意書)」(2007.4)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스즈키 의원은 질의서에서 ‘스쿨’에 관한 정의,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명칭, 그에 따른 폐해 여부에 대해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외무성은 동일 언어를 연수한 직원을 총칭해 ‘스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스쿨’이라는 별도 조직은 없지만 2007년 5월 현재 중국어, 프

랑스어, 러시아어, 영어 및 스페인어 이외에 36개국 언어가 연수 언어로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연수는 외교관의 직무 특성상 필요한 과정이므로 별다른 폐해는 없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외무성의 설명을 고려하면, ‘한국어’를 연수 언어로 지정받아 한일관계 및 한반도 지역전문가로 성장하는 코리아스쿨 외교관이 존재할 것이다.

이 글에서 주인공으로 조명하는 마에다 도시카즈(前田利一, 1921~2002)가 바로 그 코리아스쿨의 원조격에 해당한다. 심지어 그는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태어나 조선총독부 관료를 거쳐 1945년 패전 후 외무성 코리아스쿨 외교관으로 재탄생한 재조선일본인 출신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주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로 ‘금의환향’하며 한반도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러한 인물이 과연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에 어떻게 임하며, 1965년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 이르는지, 다소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 마에다 도시카즈 주한일본대사 신임장 제정
출처: 국가기록원

1. 마에다의 식민지 조선 체험과 인천에 대한 기억

1921년 인천에서 출생한 마에다는 경성앵정소학교와 경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거쳐 법문학부 법학과로 진학했다. 즉 그는 초등부터 고등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식민지 조선에서 이수한 인물이다. 그리고 1943년 7월 고등문관시험(행정과)에 합격하고 9월 졸업과 동시에 총독부에서 공식생활을 시작했다. 마에다는 문서과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함경북도 경부(警部)로 임명되어 경찰 계통에서 경력을 쌓아갔다. 당시 함경북도는 소련과 만주와의 접경지역으로, 백두산과 두만강을 경계로 첩보전과 같은 스파이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전선이였다. 더욱이 이 지역은 남만주철도(滿鐵)의 선로가 두만강을 넘어 나진항까지 연장된 관계로 치안유지 차원에서도 부각되었다. 이러한 지역에서 마에다는 감시와 단속 강화 업무를 1년 남짓 담당했다. 그는 패전 직전인 1945년 8월 초에 조선총독부 광공국(鑛工局) 동원과로 배치되어 전시물자 및 노동력의 총동원에 진력하다가 연합군에 의해 낫선 고국(일본)으로 돌려보내졌다.

그 후 마에다는 5·16군사정변 이후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을 위해 일본 측이 파견한 첫 장기출장 외교관으로 선발되어, 십여 년 만에 고향(인천)과 마주했다. 그 순간 그는, 그리움이 밀려온 나머지 사진기 셔터를 수없이 눌렀다. 이윽고 그곳 한국인들과 한국어로 소통하며 식민지 조선을 그리워하던 그는 집 안마당으로 들어오라는 호의까지 얻었다. 마에다의 현지 안내인이 지역주민들에게 추가 설명을 하자 “이 집에는 마에다(前田)라는 사람은 없었다. 이나모리(稲森)라는 사람이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마에다는 틀림없다며 강하게 긍정했다. 왜냐하면 그의 모친(稻森)의 생가였다는 점을 그곳 이웃들이 정확하게 기억했기 때문이다. 마에다가 모친의 성씨를 기억하는 한국인(양복점 운영)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일본으로 돌아간 외할머니, 외삼촌의 생사와 함께 현재는 미에(三重)현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하자, 대화 상대인 한국인 또한 어떤 그리움에 젖는 듯했다. 마에다는 귀국 후 지인들에게 이 출장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2. 코리아스쿨의 탄생 경위와 덴리대학 연수

마에다는 패전 후 조선총독부의 해체로 인해 연금 수령 요건인 근속연수를 못 채우고 있었다. 재취업이 필요했던 그는 총독부 상사였던 야마나미키오(山名酒喜男)의 호출을 받고 1946년 1월부터 일본 외무성 관리국에서 관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마에다가 외무성으로 배치된 경위에는 쓰보이 사치오(坪井幸生)의 소속 변경과 본직 해제, 야마나의 역할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쓰보이의 경우 조선총독부 상사였던 니시히로 다다오(西廣忠雄) 경무국장으로부터 본인이 외무성 외무사무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전달받았다. 쓰보이는 얼마간의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일제강점기 단속 대상으로 여겼던 반일독립투사들의 나라(한국)와 향후 외교관계를 맺는 일은 경찰관료 출신자인 본인에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거듭 사직 의사를 밝혔다. 결국 쓰보이는 본직에서 해제되었고 그 업무를 마에다가 전담하게 되었다.

야마나의 경우 패전 당시 남한에 진주한 미군, 그리고 주한 미군정청(USAMGIK)에 협력하며 조선 통치 관련 제반 사항을 인수인계하고 귀국 후 외무성으로 배치되었다. 야마나는 총독관방 문서과장 시절에 부하로 만난 마에다의 인품과 학구열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조선과의 관계 재구축에 이바지할 인물로 기대가 높았다. 야마나가 주목한 마에다의 성장 가능성은 당시 일본 내 유일하게 조선어학과를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인 덴리(天理)대학으로의 연수를 주선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와 함께 마에다가 조선과의 장래를 대비해서 인적 자원이 필요하며, 특히 언어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상사에게 강조하면서 본인(마에다)의 덴리대학 연수가 실현되었다. 이는 마에다가 코리아스쿨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
마에다가 일본 외무성 코리아스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한반도 출신 유력자들이 일조한 측면은
현대 일본의 대한민국 외교역량이 여전히 일제의 ‘권력과 사람’으로
연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이처럼 쓰보이의 공백을 계기로 조선 관련 업무가 마에다로 일원화되었고, 야마나가 마에다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외무성 코리아스쿨 탄생의 산파역을 한 셈이다.

다른 한편으로 덴리대학 연수 과정에서 마에다에게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의 면모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그의 경성제국대학 시절부터 은사인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교수는 조선의 문학과 사상사의 권위자이면서 수준 높은 조선어 구사력으로 마에다를 지도했다. 아울러 다카하시는 아내와 함께 한반도와 관련된 기본 지식은 물론 조선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짧은 연수 기간임에도 상당히 밀도 높은 지식을 마에다에게 전수했다. 그리고 기시 유리치(岸勇一: 전 함경남도 지사)와 같이 총독부 관료를 거쳐 덴리대학 총장을 역임한 인물들이 마에다의 주변에 포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마에다가 일본 외무성 코리아스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한반도 출신 유력자들이 일조한 측면은 현대 일본의 대한민국 외교역량이 여전히 일제의 ‘권력과 사람’으로 연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한일국교정상화 회담 참가와 구보타 망언에 대한 재인식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한일국교정상화 예비회담(1951. 10~11)과 제1차 회담(1952. 2~4)이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마에다는 덴리 대학 연수 과정(1951. 4~1952. 3)에 있었던 관계로 제2차 회담(1953. 4~7)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제2차, 제3차 회담(1953. 10. 6~21)은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상호 인식의 격차로 교섭이 결렬된 상황을 이어받은 데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 개최된 자리이기도 했다. 더욱이 평화선(이승만라인)에 대한 일본 국민감정의 악화, 그로 인한 의제별 관계 부처의 비협조적 자세에 더해 원칙론자인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가 대표를 맡으면서 험난한 교섭이 예고되었다. 마에다는 그 유명한 ‘구보타 망언’(1953. 10. 15)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는 훗날 이 망언에 대해 증언하며 일본으로서는 정당방어였다고 항변했다. 특히 한국 측이 발언의 일부만을 편집하여 교섭 테이블에서 압박하고,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부분에만 주목하여 보도함에 따라 구보타 망언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증언은 마에다가 외무성 특별기획 인터뷰(1994)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었는데, 흥미로운 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인 그의 반전이다. 즉 마에다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외무성 공식 인터뷰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 비공식적 의견이 나오게 된 계기는 마에다의 경성제국대학 선배인 스즈키 슌조(鈴木俊三)가 아사히신문 오사카판에 한국을 겨냥해서 투고한 글(1985. 6. 14 조간) 때문이다.

거기에는 구보타 망언과 동일하게 식민지 시혜론 내지는 근대화론이 반복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마에다는 스즈키의 일방적 항변이 결국 무의미한 한일 양국의 공방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한일관계에서 보다 생산적인 접근

“

마에다의 공식, 비공식 발언의 불일치 내지는 양가적인 감정은
여타 재조선일본인들의 패전 후 조선에 대한 인식과는 결이 다른,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에다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35여 년에 걸쳐 식민지 통치하에 놓여 일본으로부터 무엇보다 주권, 그리고 토지, 언어, 자기의 성씨 등을 빼앗겼다는, 보다 근원적인 점을 문제시키고 있으며, 이처럼 매우 중요한 점을 잊혀두고” 한국 측에 일제강점기의 플러스 면만을 들어 반박하는 것은, 구보타 망언의 되풀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 글의 말미에서 마에다는 구보타 대표의 망언 이후에 되돌아온 한국 측 답변을 재구성하고, 이를 스즈키가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처럼 마에다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구보타 망언을 인용하여 스즈키의 제국의식을 비판하고 한일관계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는 재조선 일본인 출신자이자 코리아스쿨 외교관으로 외길 인생을 걸어온 마에다이기에, 그리고 퇴임 이후의 시점(1985.3)이었기에 가능했던 소신 발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마에다의 공식, 비공식 발언의 불일치 내지는 양가적인 감정은 여타 재조선일본인들의 패전 후 조선에 대한 인식과는 결이 다른,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 마에다의 동북아과장 취임과 한국 출장

해외공관 근무(1956.8~1960.4)로 인해 한일회담에서 떠나 있던 마에다

는 아시아국 동북아시아과 과장으로 승진하고 복귀했다(1960.5). 재조선 일본인 출신자이기도 한 이세키 유지로(伊關佑二郎) 아시아국 국장이 한일 회담 타결을 위해 마에다를 책임자로 보고 과장으로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일본 외무성 내에서도 대아시아 정책의 우선순위를 한국에 두겠다는 의미이며, 이와 동시에 코리아스쿨의 본격적인 활동공간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이세키 국장과 마에다 과장의 활동은 한일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호응과 맞물리며 한일회담을 크게 진전시켰으며, 교섭을 마무리 짓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

1960년 9월 마에다 과장은 이세키 국장과 함께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무대신의 방한 수행원 자격으로 한일회담 전선에 뛰어들었다. 예컨대 고사카 외상의 김포공항 도착 성명은 마에다 과장을 중심으로 같은 과 소속 직원들이 역할 분담하여 우야마 아쓰시(宇山厚) 참사관, 외무대신, 수상의 수정을 거쳐서 탄생한 문안이다. 특히 기존의 성명과는 다르게 일제 식민통치라는 과거에 대해 어떻게 언급할지를 가장 중요시했다고 한다.

또한 마에다는 장면 내각과 이케다(池田) 내각 사이에 진행된 제5차 회담(1960.10.25~1961.5.15)부터는 각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다 참가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권의 내부 사정과 방침, 일반 대중의 인식과 평가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외무성을 대표해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장기 한국 출장(1961.8.7~16)을 수행했다. 이른바 ‘마에다 보고서’라고 불리는 이 출장보고서는 한국 현지 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던 외무성 내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보고서는 군사정권을 상대로 한일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조와 함께 일본 정부의 한일회담 정책 방향을 설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출장을 통해 마에다는 한국의 민중들이 군사정권에 대해 호의적이진 않지만, 장면 내각은 여당 내부의 통솔력조차 부족했었기에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는 더더욱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4·19혁명 이후에 남북평화협상으로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용공(容共)적 진보 세력의 대두는 반공의식의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군사정권의 등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안보 공백을 메우고 국가 존립을 위해 군사정권을 차선책으로 받아들인다는 민심을 읽었다. 더 나아가 안보질서가 바로 서려면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데, 국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의 지원에 더해 서방 국가들의, 그리고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 생활양식의 유사성, 아시아 선진공업국의 선례라는 한국 측 평가에 주목했다. 마에다는 한국 측이 회담 의제에 임하는 명분과 순리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내부에 보고했다.

5. 한일협정 체결과 마에다의 반성

1962년 11월 ‘김종필·오히라(大平) 메모’를 통해 한일회담 청구권 문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해결 방향이 제시되면서 교섭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교섭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64년 7월에 한일 양국의 외교 책임자는 이동원,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로 교체되었다. 11월 시나 외무대신은 이동원 장관의 방한 초청장에 응한다고 답신했다. 뒤이어 시나는 마에다를 서울로 파견하게 되었음을 알리며 그에 대한 소개글을 한국 측에

보냈다. 그 소개글에서 시나는 마에다에 대해 한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 다년간 헌신해 온 외교관이라고 치켜세우고, 본인(시나)의 방한 준비 대표로 처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마에다는 시나 외무대신의 관방조사관(1964.12) 자격으로 서울에 체류하며 현지 사정을 실시간으로 도쿄에 제공하였고, 이로써 일본 측의 정책 검토와 결정 과정은 탄력을 받았다.

시나 외무대신의 1965년 2월 방한 일정을 앞두고, 마에다 관방조사관은 한국 외무부 관계자를 비롯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시나 외무대신의 방한 시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말, 즉 ‘과거를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가 절실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 취지를 반영해서 마에다는 도쿄에 전보를 보냈으나 방한 전날인 2월 16일 본국에서 돌아온 대답은 수용 불가였다. 그러나 그날 늦은 밤에 또 한 번의 전보가 날아들었다. 시나 장관의 손을 거쳐 도착 성명의 내용이 변경되어 ‘깊이 반성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17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시나 외무대신은 성명을 발표하고 마에다가 이를 통역하면서 ‘깊이 반성한다’라는 지점에 특별히 힘주어 전해졌다. 이 성명은 한국 측에서 크게 환영받았으며, 마에다 자신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선명한 인상이 뇌리에 남았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그는 관방조사관으로 파견된 업무가 현장의 생동감을 전하는 것이었으므로 시나의 도착 성명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정년 퇴임 이후 마에다는 그때까지 많은 한국인을 접해 왔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교정상화를 성공시킨 요인 가운데, 특히 시나 방한 성명의 ‘반성’이라는 말 한마디가 당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이는 단순한 말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렬한 인상과 영향을 끼쳤다고 확신했다. 그러한 만족감에 더해 1965년 2월 20일 시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며 발표된 한일공동성

“

마에다 관방조사관은 한국 외무부 관계자를 비롯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시나 외무대신의 방한 시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말, 즉 ‘과거를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가 절실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

명서에도 ‘깊이 반성한다’는 문구가 기존의 초안과 다르게 삽입된 터라, 마에다는 시나 외무대신 일행의 귀국행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만감이 교차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놓았다.

시나 외무대신의 방한에 대한 답방으로 이동원 장관의 3월 방일을 앞두고, 마에다는 일시 귀국 명령을 받아 준비에 임하고 수행원 역할을 맡았다. 마에다는 3월 26일 이동원 외무장관과 김동조 주일대사를 대동하고 히로히토(裕仁) 일왕을 알현했다. 참고로 이 만남에 대해 일본 측 관계자는 이동원 장관이 관료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미국 여성의 에피소드, 이방자(李方子)의 안부 등을 나누며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40여 분에 걸친 만남으로 이어져 서로가 만족스러워했다. 이 자리에 마에다가 통역으로 배석하며 당시의 즐겁고 평온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마에다는 히로히토 일왕의 파안대소를 보며, 한일관계가 이제는 큰 변화의 고비를 넘겼다고 직감했다.

마에다는 1965년 6월 한일협정 조인식 직전, 또다시 일시 귀국 명령을 받아 힐튼호텔에서 철야로 한국어 조약문을 체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은 한국어 표현에 상당히 엄격한 자세를 취하며 개입했다. 이에 마에다는 제한된 시간 안에 완수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며, 때로는 한국 측과 격론이 오가는 상황도 있었지만, 서로가 열의를 다해 가까스로 조인식 직



시나 에스사부로 외무대신 방한

출처: 국가기록원

전에 조약문 작성을 완료해 냈다. 실제로 한일협정 문서는 교환공문, 합의의사록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양에 달하는데, 이 작업 전체를 일본 측은 마에다의 실무 책임하에 완수해 낸 것이다. 6월 22일 조인식이 총리관저에서 열리면서 마에다는 시나 외무대신의 인사를 한국어로 통역했다. 조인식이 매스컴에 공개되면서 그의 통역도 한국에 전해졌다. 이에 한국 지인들이 조인식에서 본 마에다의 모습을 반가워하며 “한국어는 그다지 잘 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해주어서 고생 많았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이는 통역의 수준을 떠나서 일본인이 역사적인 순간에 한국어로 노

력해 준 모습에 감사를 표한 한국인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훗날 마에다는 한일국교정상화 20주년 특별기획에서 1965년 조인식이 성공리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관계자들이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그는 이 조인식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경험이라고 형용하면서 실로 “세기의 일대 이벤트”였다는 소회를 밝혔다.

6. 에필로그

마에다는 초등부터 고등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식민지 조선에서 이수했으며, 그 뒤로는 짧지만 2년 정도의 총독부 관료 생활을 역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배경으로 경찰 계통에서 경력을 쌓고, 패전 직전까지 전시물자와 노동력의 총동원에 진력했었다는 사실이다. 마에다는 이러한 총독부 관료 시절에 대해선 일절 함구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의도와 자세는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패전을 거쳐 코리아스쿨 외교관으로 재탄생하고, 한일 회담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활약하면서 국교 수립에 일조한 측면은, 그 나름대로의 한국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마에다는 구보타 망언을 비공식적으로나마 비판했으며, 시나 외무대신의 도착 성명(1965.2.17)과 한일공동성명서(1965.2.20)에 반성한다는 문구를 삽입했고, 한국어 통역과 함께 조인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 것이다. 이는 마에다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침묵 대신 애정 어린 속죄의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 그는 한일협정 체결을 통한 ‘1965년 체제’의

포커스 II

성립으로 화해를 달성했다는 의미에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 또한 자기만의 착각이라고 매도당하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2025년에는 서로에게 긴 안목으로 아량과 여유가 절실히 보인다.



박경민(朴敬珉, Park, Kyung-min)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일본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 법학연구과에서 정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제관계론과 외교사를 기반으로 한반도, 일본에 대해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살았던 일본인들을 추적하며 연구 전선을 넓히고 있다.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케임브리지대학교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연구로는 『朝鮮引揚げと日韓外交正常化交渉への道』(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8)가 있다.

저항운동 공간에서 냉전의 변방이 된 북강원도

현명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해방 후 북강원도 행정구역 개편

1946년 9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강원도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함경남도에 속해 있던 원산과 그 일대를 북강원도로 편입시킨다는 것이었다. 강원도는 38선으로 인해 거의 양분되다시피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였다. 북강원도는 남강원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다. 북강원도에 인접한 함경남도 원산 일대는 식민지기 북한 지역의 대표적 산업지구였다. 북한 지역 최초 개항장인 원산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무역과 석유·철도 산업의 중심지였다. 이 일대를 함경남도에서 떼어내어 북강원도의 규모를 키울 목적이었다.

북강원도 행정구역 개편은 해방기 북한 정권의 정치적 지향을 보여준다. 해방 후 북한이 물려받은 것은 발전된 중앙과 낙후된 지방으로 점철된

“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 활동가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하는 것을 막는 방편이었다. 식민권력이 빠진 공백에서
발생한 권력투쟁의 실상이기도 했다.

”

불균형적 영토였다. 북한 정권은 해방된 나라에서 모든 지방이 평등한 국가를 지향했다. 이른바 사회주의적 균형공간론을 실현코자 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새롭게 권력을 잡고자 한 김일성 세력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일제강점기 국외에서 활동했던 이들은 국내에서 활동해 온 지역 운동가 세력을 경계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 활동가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하는 것을 막는 방편이었다. 식민권력이 빠진 공백에서 발생한 권력투쟁의 실상이기도 했다.

2. 사회·경제적 이유

분단된 강원도의 남과 북은 규모가 비슷해 보였다. 두 강원도에 똑같이 10개 군이 속했기 때문이다. 미군정 하지(John R. Hodge) 사령관은 분단 이후, 황해도는 북측에, 경기도는 남측에 완전히 넘기자면서도 강원도는 양측이 동등하게 통제권을 나누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분단의 결과 북강원도는 인구가 가장 적은 도로 전락했다. 해방 직전 통계에 따르면, 당시 가장 규모가 작은 함경북도 인구가 93만 명이었는데, 분단 이후 북강원도 인구는 92만 명이 되었다. 강릉(14,200), 삼척(14,700), 원주(14,200), 춘천(11,600), 평창(8,800) 등 강원도에서 인구가 많

포커스 II



1945년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출간한 지도의 일부(강원도 경계와 분단 표시는 필자)

출처: "Japan and Korea," compiled and drawn by the Cartographic Section, National Geographic Society (United States); James M. Darley, chief cartographer(en.m.wikipedia.org/wiki/File:National_Geographic_map_of_Korea_and_Japan,_1945.jpg)

은 지역을 잃은 결과였다.

북강원도는 산업시설 또한 갖춰지지 않았다. 북한 주둔 소련군 조사보고서에는 북강원도에 속한 철원에 방직공장 1개소만 기재되어 있다. 이마저도 소련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원자재가 공급되지 않아 가동률이 35%를 밑돌았다. 제2차 세계대전 때조차도 45% 가까운 가동률을 보인 공장이었다.

마지막으로 교통 역시 좋지 않았다. 북강원도에서는 평양으로 직접 가는 철도가 없었다. 철원에서 경원선을 타고 원산으로 가서 평원선으로 갈아타 평양으로 가면 3일이 걸리기도 했다. 함경북도와 함께 평양까지 직

접 가는 철도가 없는 유일한 지방이기도 했다.

북강원도를 평양에서도 덜 중요하게 여겼음은 1945년 10월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에서 드러났다. 이 회의는 광복 이후 전국에서 조직된 인민위원회의 총회 같은 모임이었는데, 북한 지역만 소집한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북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의향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모임에 북강원도 대표는 초청받지 못했다. ‘북조선 5도’는 북강원도를 빼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그리고 황해도였다.

그렇다면 1946년 9월 원산과 그 일대가 편입된 북강원도는 다른 북한 지방에 비견되는 곳이 되었을까? 이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기도 어렵다. 이 지역을 포함함으로써 북강원도 인구는 30% 증가했다. 적어도 함경북도보다는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다른 네 지방 인구의 60~70% 수준밖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의 경제규모 역시 극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1948년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세운 국세 징세계획을 보면, 북강원도 할당 세금은 가장 큰 규모인 평안남도과 비교해 70% 수준에 그쳤다. 도시에서 거두는 세금만 보자면 원산 등을 포함한 이후에도 전국 최하위였다.

한편, 행정구역 개편 전에 북강원도는 교사는 충원되었으나 교과서가 없어 곤란을 겪었다. 개편 후에도 북강원도 청년회들에서는 중앙에서 신문이 도착하지 않아 독서회 진행에 곤란을 겪었다. 지방 주민의 삶에도 그들의 이념사업에도 행정구역 개편이 가지고 온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하지만 실제적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북강원도는 행정구역 면에서 도시-농촌 구조를 완비하고 1947년 지방선거에 임할 수 있었다. 새롭게 탄생하는 북한 정권이 아래로부터 정당성을 갖춰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선거였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북강원도는 북한의 국가 형성에 정

資料 5. 元山市·安邊郡·文川郡을 江原道로 編入하는 決定書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決定 第七〇號

北朝鮮 江原道는 그 面積이 六道中 가장 좁고 人口가 極히 稀薄하며 山岳高原地帶가 大部分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交通條件이 劣惡할뿐 아니라 自然資源이 極히 貧弱한 곳이다. 이리하여 從來 江原道는 他 五道에 比하여 行政·經濟·文化 各方面에 있어서 兪체나 顯著한 差異가 생기어 江原道의 發展을 至極히 阻害할 뿐만아니라 나아가서 北朝鮮全體의 發展을 遲延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江原道內에는 道人民委員會所在地에 適當한 都市가 없으며 鐵原市의 發展將來는 到底히 期할 수 없는 狀態에 있다.

他方平壤과 鐵原의 連絡에는 元山을 通過하여야 되는 交通上事情은 元山과 江原道와의 關係를 至極히 緊密하게 만든다. 이같은 諸條件은 元山市를 江原道로 編入할 必要를 強力하게 發生시킨다. 그러나 元山市는 文川郡內에 있는 諸產業·交通(製鍊所·製鋼所·시멘트工場 文川炭坑·北港施設等)施設과 有機的 關係를 가졌으며 따라서 文川郡과 元山市는 分離할 수 없다. 또 江原道로서는 이만한 產業施設을 받지않고서는 劃期的發展을 期할 수는 없다.

이같은 措置가 또한 元山市에 對하여는 相當한 도움이 되며 威鏡道로서도 過大한 支障이 없다는 것을 全般的見地에서 보아 認定하는 바이다. 以上에 指摘한 見地에서 第二次 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

- 一. 元山市 安邊郡 文川郡의 從來 行政區域을 江原道에 編入할 것.
- 二. 江原道人民委員會 江原道裁判所, 同 檢察所의 所在地를 鐵原市로부터 元山市에로 移轉할 것.
- 三. 鐵原市를 鐵原郡으로 編入할 것.
- 四. 江原道 威鏡南道의 各道人民委員會委員長은 九月 二十日까지 事務引繼를 終了할 것.
- 五. 安邊郡 文川郡 各 人民委員會委員長은 九月 十日까지 事務引繼를 終了할 것.

一九四六年 九月 五日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委員長 金日成

書記長 康良燮

원산시, 안변군, 문천군을 강원도로 편입하는 결정서(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 제70호)

당시 위원장이던 김일성의 이름으로 1946년 9월 5일에 발령하였다.

출처: 『북한관계사료집』 5, 국사편찬위원회, 1987, 24쪽

“
사회주의는 적어도 겉으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로운 경제를 표방했다.
북강원도는 그러한 이념의 실험장이었다.
”

상 지방으로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

정상 규모의 도시-농촌을 가진 지방을 만들고자 했던 사실은 사회주의 사상이 북한의 국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시켜 준다.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가 도시에 농촌을 종속시켰다고 비판해 왔다. 산업경제(도시)를 위해 농산물과 원재료(농촌) 가격을 낮춰 노동자를 착취하고 농민을 소외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사회주의는 적어도 겉으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로운 경제를 표방했다. 북강원도는 그러한 이념의 실험장이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상의 실현만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이 관여되었다.

3. 정치적 의도

1946년 9월 북강원도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사회 조직 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몰고 왔다. 첫째, 철원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북강원도 도청 소재지였던 지위를 잃어버렸다. 둘째, 원산은 북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됨으로써 함경남도 행정조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두 변화는 공교롭게도 김일성 세력의 잠재적 경쟁자를 견제하는 기능을 했다.

우선 해방 후 철원에서는 장안과 계열의 공산주의자들이 활약했다. 이들은 일제 패망 직후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서울 장안빌딩에서 결성되

었다 해서 장안파로 불린다. 이영(李英)과 최익한(崔益翰) 등이 주도가 되어 활동했으나, 박헌영(朴憲永) 등이 중심이 된 재건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곧 와해되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장안파 활동 중 눈에 띄는 것은 철원에 혁명사업 완수를 위해 정치군사학교를 세운 것이다.

장안파는 서울에서 출발했지만, 활동의 정당성은 평양에서 찾으려 했다.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한반도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수도는 소련군이 주둔한 평양이었다. 평양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도한 인물은 소련의 후광을 입은 김일성이었고, 이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큰 반발이 없었다. 장안파도 상징적으로 김일성을 철원 정치군사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했다. 평양에 직접 가서 새로운 운동 노선과 방침을 받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평양의 김일성 세력은 장안파의 철원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대봉(金大鳳)을 보내 철원 정치군사학교를 장악했다. 김대봉은 양양 농촌운동가 출신이긴 하지만 소련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사회주의자였다. 철원 현지에 기반이 없는 외부인사를 보낸 것이다.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북강원도에도 현지 운동가들이 조직한 아래로부터의 질서 유지 단체가 있었다. 해방 직후에는 인민위원회가 생겨났다. 철원에서는 현지에서 3·1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이봉하(李鳳夏)가 위원회를 이끌었다. 또한 현지 운동가 39명은 북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도 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 여기에는 농촌소설 『고향』의 작가 이기영(李箕永)이 참여하기도 했다.

평양은 현지 운동가들이 현지 조직을 통제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김대봉을 보낸 것은 장안파의 정치군사학교만이 아니라 북강원도 도 인민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평양 개입 이후 북강원도 도 인민위원

회는 대폭 교체되었다. 1946년 9월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는 1년 동안 철원에서 성장했던 도 검찰소 등 현지 기관이 원산으로 이전했다.

원산이 함경남도에서 이탈된 것은 현지 운동가 세력이 약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함흥과 원산의 현지 운동가들이 함경남도 도 인민위원회라는 하나의 조직에서 결집하는 것을 차단했다.

일제강점기 함경남도는 저항운동이 지속된 현장이었다. 원산에서는 최대 노동쟁의인 원산총파업(1929)이 있었고 1930년대 말까지 석유 및 철도 노동자의 조직운동이 있었다. 당시 일제의 대규모 질소비료 공장지대가 있던 함흥 일대에는 1930년대 노동조합운동이 전개되었다. 국내에서 식민지배를 버틴 운동가들이 해방 후 많이 모여 있던 지역 중 하나가 함경남도였다.

해방 후 함경남도 국내운동 세력과 평양으로 귀환한 해외운동 세력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함흥 기반 운동가 오기섭(吳琪燮)과 김일성의 논쟁이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지지를 받던 오기섭은 사회주의체제 아래에서도 노동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무결성(integrity)을 지닌 사회주의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일성은 전평의 북한 지도부를 해체했다.

원산 현지 출신 운동가들 역시 평양의 경계 대상이 되었다. 해방 후 원산에서 인민위원회를 이끈 것은 3·1운동의 주역 중 한 명인 강기덕(康基德)이었다. 그는 신탁통치와 관련하여 북한 정권과 의견을 달리해 월남했다. 또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가는 이주하(李舟河)였다. 평양 세력은 고영찬 등 이주하와 가까운 현지 운동가를 지역 노동당 사업에서 배제시켰다.



해방 후 소련군 진주 당시 건설된 것으로 알려진 철원 노동당사
출처: 필자 촬영

이렇듯 평양의 김일성 세력은 함경남도 국내운동 세력을 경계했다. 이는 정치적 흑색선전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에서 귀환해 김일성을 뒷받침한 한일무(韓一武)와 김열(金閼) 등이 특히 열성적이었다. 이들은 원산을 ‘종파주의 소굴,’ 함경남도를 ‘종파주의 실지’라고 매도했다. ‘종파주의’는 국가적 이익이 아닌 지역이나 파벌의 편협한 이해에 사로잡혀 있다고 호도하며 정적을 공격하는 말이었다. 한일무와 김열은 각각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원산의 강원도 편입은 중앙의 지방 통제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해방

“

식민 잔재를 청산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분단체제를
구축해야 했던 한국사의 비극은 강원도에서도 반복되었다.

”

후 원산 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민중저항운동의 유산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장소였다. 1946년에는 문인들이 사회주의 이념이나 계급 투쟁 언어가 배제된 시집 『응향』을 내어 문제가 되었다. 1948년에는 원산 기술대학교(Wonsan Technical College) 학생 200명이 김일성 정권이 반대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TCOK)을 환영하는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이러한 원산을 함경남도에서 떼어 강원도로 붙인 것은 결국 중앙의 효율적 지방 통제를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었다.

4. 맺음말: 냉전의 변방으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북강원도라 칭했지만, 북한에서는 북강원도를 강원도라 부른다. 분단된 한반도에는 강원도가 두 곳 있는 셈이다. 북한에서는 경기도가 사라지고, 남한에서는 황해도가 없지만, 강원도는 남과 북에 모두 남아 있다.

강원도라는 이름은 강릉과 원주 두 지역명의 첫 글자에서 왔다. 북강원도는 강릉도 원주도 없는 강원도인 셈이다. 강원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이유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원래 이름을 유지함으로써 북강원도는 강원도의 역사를 이어받을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펼쳐진 치열한 이념 대결과 군사 경

포커스 II

쟁에서 북강원도는 최전방 중 하나로 위치하게 되었다. 규모를 키운 것이나 중앙의 통제를 강화한 것은, 냉전의 전장이 되는 데 필요한 과정 중 하나였다. 식민 잔재를 청산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분단체제를 구축해야 했던 한국사의 비극은 강원도에서도 반복되었다.



현명호(玄明昊, Hyun, Myung-ho)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뉴욕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동과 도시를 키워드로 하는 한국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지역 첫 번째 국제도시인 원산의 역사에 관심이 많다. 한글과 영어 두 언어로 저술 활동을 한 경험을 살려 역사 현안 용어의 번역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역사의 재현과 비재현

영화 <하얼빈>의 역사성과 현재성

전영욱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재현의 조건: 역설로서의 식민지

누군가 북거일의 『碑銘을 찾아서: 京城 쇼우와 62년』¹이란 소설을 알려주었다. 이 소설은 안중근의 거사가 실패하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1909년 10월로부터 16년을 더 살았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한국에서 처음 ‘대체역사(alternative history)’란 용어를 내세웠던 만큼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역사적 실존인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 이에 비해 1987년(쇼와 62)을 살아가는 주인공 기노시다 히데요(木下英世) 등은 우리가 겪지 않은 미래를 표상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럴듯한’ 존재이다. 이들은 ‘일본 조선반도의 경성’이라는 대체역사에 매몰되어 있거나 순응하며 살아간다.

조금만 더 이 소설을 이야기해 보자. 1987년 시점의 일본은 가라후토(樺太)와 지시마(千島)-조

¹ 이 소설은 한국 문단에 ‘대체역사’란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다. 최애순, 2019, 「대체역사의 국내 수용 양상-북거일의 <비명을 찾아서>가 탄생하기까지」, 『우리문학연구』 61.

선-대만-남양-관동주-만주국을 영유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대한 나라이다. 이는 이토가 죽지 않음으로써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일본은 조선을 병합한 뒤에도 군국주의를 잘 통제하였고,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제국이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지도국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영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전쟁을 피했고, 이는 일본의 번영으로 이어졌다. 다만, 1950~1960년대에 걸쳐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소설의 시점에도 정치와 사회는 꽤 혼란스럽다.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토의 강력한 “내지화 정책”은 식민통치의 기조로 충실히 계승되었다. 1940년대 말 즈음이 되면 조선어와 조선역사가 완전히 사라진다. 조선인은 총량한 황국신민으로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주인공의 질문이 시작된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수많은 계기를 거쳐 임시정부가 있다고 알려진 상하이로 떠난다. 비로소 주인공이 식민지를 벗어나는 결말을 통해 소설은 확실히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놓이게 될 상황’을 환기했다. 말 그대로 ‘진정한 탈식민’을 질문하려는 소설의 메시지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소설가의 초심 그 자체일 것이다. 어쨌든 이 소설은 그렇다.

굳이 대체역사를 다룬 예전의 역사 콘텐츠를 먼저 언급한 것은 영화가 사실(史實)을 재현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 흥미롭기 때문이다. 영화는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 대화를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하면서 사실에 다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은 위 소설이 그러했듯이 영화에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인간 안중근의 변민을 묘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다분히 목적론적인 태도

“

인간 안중근의 번민을 묘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다분히 목적론적인 태도이다. 영화의 마지막 대사처럼 ‘불을 밝히고’,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가는’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 영화의 수행성은 실존인물과 가상인물 사이에 펼친 상호작용의 결과일 것이다.

”

이다. 영화의 마지막 대사처럼 ‘불을 밝히고’,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가는’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 영화의 수행성은 실존인물과 가상인물 사이에 펼친 상호작용의 결과일 것이다. 진짜와 가짜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각본과 연출 덕분에, 그리고 감독의 고민과 솔직함으로 인해 영화는 학계의 고증이라는 칼부림을 매우 잘 피하고 있다.

그런데 리얼리티를 상상했다고 할 수 있을 법한 이 역설적 전략은 안중근을 모르는 이가 없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완전한 대체역사 속에서 안중근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한국 역사에서 안중근이 차지하는 위상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물’로서의 상징성에 반해 안중근을 다룬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또는 개중에 이른바 흥행을 거둔 사례가 적은 것은 이미 ‘완벽히’ 알고 있는 역사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래서 안중근의 거사가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뽑아내는 전략에는 새로운 시공간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소설은 원래의 역사에서 독립운동을 지우고, 전시폭력을 지우고, 이로써 해방이 존재한 적이 없던 시공간을 만들었다. 탈식민을 외치는 소설가의 초심은 완

벽한 식민지가 가능하다는 소설가의 편견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을 인식해야만 예정된 미래로서의 식민지와 해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안중근의 거사는 식민지라는 미래에 췌기를 박았지만, 현실이 건널 만하다는 가정을 깨부수고, 해방을 지향해야 하는 역사적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식민지가 되지 않았거나 식민지가 건널 만한 현실로 주어졌다면, 해방을 향한 걸음은 첫 발자국조차 불가능하다. 겪지 말아야 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식민지 경험은 역사의 역설이라고 할 수도 있다.

2. 재현의 방법: 재현하지 않는 것의 의미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안중근의 줄거리를 <하얼빈>에 빗대어 말해보고자 한다. 영화에서 안중근은 자신의 ‘역사’를 특별히 드러내지 않는다. 그가 양반 출신이고, 그래서 16세가 되던 때에 ‘*한국을 위태롭게 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원인이 된 병균 동학당*²’을 소탕하는 데 앞장섰으며, ‘*도마(多默, Thomas)*’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과 의병운동을 연결하고자 했다는 등의 역사적 설명은 영화가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다. 나중에 미공개 영상으로 공개된 동학쟁이 우덕순과 양반 김상현의 대화를 통해 영화가 안중근의 정체성을 약간

2 이 영화는 다양한 상상력으로 구성되었지만, 그 기본은 『안응칠역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 기울여 표기한 구절은 모두 『안응칠역사』를 인용하거나 재구성했음을 밝힌다. 『안응칠역사』는 다음 판본을 활용했다. 尹炳爽 譯編, 1999, 『安重根傳記全集』, 국가보훈처.

의식했다는 점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덕순 스스로가 ‘동학쟁이’였던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에서 의병이 되기까지 쌓인 정체성은 전혀 재현되지 않았다. 이는 “대한(大韓)의 독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로써 ‘동지(同志)’라는 호칭은 등장인물의 어떤 개성보다 아득히 저 위에 있게 된다.

영화 속의 그 누구도 과거에서 출발하지 않는 설정은 독립운동의 현재성을 말하기 위한 극적인 장치일 것이다. 그래서 안중근이 이토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단지(斷指)하는 행위는 현재를 빼앗은 신아산전투의 결말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신아산전투는 안중근에게 많은 것을 빼앗았는데,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독립운동의 시간을 멈추게 했다는 데에 있었다. ‘약하고 어진 존재’가 ‘강하고 악한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전가의 보도, 즉 만국공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이창섭, 김상현, 우덕순 등의 반대에도 일본군 장교 모리 다쓰오를 풀어준 탓에 많은 동지가 죽는다. 전투 이후 혼자가 되어 기지에 도착했지만 ‘용서를 구할 마음은 없었고, 동지들을 대신해 이등(伊藤)이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기까지의 변민은 매우 적나라하다.

이 변민은 얼어붙은 넓은 강을 죽기 직전까지 가로지르는 장면으로 표현되면서 미학적으로 이를 데 없지만, 영화의 시퀀스가 유일하게 밝힌 안중근의 정체성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 원래 역사에서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은 ‘능히 굽히기도 하고 능히 버티기도 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영웅의 모습을 자임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화는 훗날 모리에게 죽는 이창섭의 말을 통해(사실은 관객을 통해) 안중근이 ‘고결한 인간’임을 드러내려고 했다. 심지어 이창섭의 죽음은, 어찌 보면 만국공법을 운운하는 안중근의 ‘공상’ 때문이었는데도 말이다. 또한 영화는 총보다 칼



위국헌신군인본분 서비(書碑)

일본 미야기현 와카야나기(若柳)에 있는 다이린지(大林寺)는 휘순감옥 간수였던 지바 도시치(千葉十七)가 안장된 절이다. 위국헌신군인본분은 안중근이 지바에게 써준 글이며, 1979년 한국에 반환되었다. 다이린지에 서는 매년 9월 첫째 주에 안중근과 지바의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출처: 필자 촬영, 2024

과 돌이 훨씬 중요하게 묘사되는 신아산전투의 격렬함과 잔인함 속에서만 군인 안중근을 드러내되, 바로 이 정체성 때문에 안중근이 길을 잃었다는 점을 중시한다. 영화만 두고 보면, 안중근이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을 외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 해 소원하던, 늙은 도둑(늙은 늑대의 우두머리)을 내 손으로 끝내려’는 단호한 태도를 재현하기 위해 영화가 무엇을 재현하지 않았는지, 또한 무엇을 덧붙였는지 살피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는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이 스스로 ‘길을 잃은’ 경험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안중근이 이토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은 잃어버린 길을 회복함으로써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였다. 김상헌은 모진 고문 때문이라지만, 모리의

“

영화가 무엇을 재현하지 않았는지, 또한 무엇을 덧붙였는지 살피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는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이 스스로 ‘길을 잃은’ 경험 위에서 있기 때문이다.

”

밀정이 된다. 공부인은 길을 잃지는 않았지만, 노고산전투 때 남편을 잃고 잠시 침잠해 있다가 함께 걸어갈 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안중근의 옛 동지이자 공부인의 아주버님이었던 박점출은 길을 회복하지 못한 인물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등장한다. 심지어 미공개 영상부터 영화 본편에 이르기까지 가장 선명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우덕순도 1920년대에 조선인민회 하얼빈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학술적으로 밀정 혐의가 지적되기도 했다.³ 어쩌면 그도 길을 잃었을지 모른다.

천신만고 끝에 하얼빈역에 도착한 안중근은 먼저 간 동지들이 하늘에서 도울 것이라는 공부인의 격려를 받았다. 이 격려는 길을 회복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칭찬일 것이다. 통감을 했던 3년 동안 조선은 몇백 년보다 발전했는데, 왜 나를 노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토

3 ‘우덕순 밀정설’은 2019년 8월에 방영된 <KBS 시사기획 창: 밀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가 제기한 자료에 반하는 사실도 많이 있으므로 우덕순을 밀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우덕순을 밀정으로 보는 견해는 이재석 외, 2021, 『밀정, 우리 안의 적』, 지식너머를 참고하고, 우덕순의 행위를 위장전술로 보는 견해는 신운용, 2014, 『우덕순의 민족운동과 해방공간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등을 참고하면 좋다.

의 짜증 섞인 의아함, 러시아 재상에게 조선이 누구의 땅이 될 것 같은지를 묻는 주화파 이토의 비열한 확인, 이토를 죽여도 독립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김상현의 모욕적인 체념, 밀정의 존재를 눈치채고 작전을 중지하자고 권유하는 최재형의 암묵적인 패배감, 마지막까지 안중근에게 매달리는 모리의 서슬 퍼런 추격 등, 거사의 의미를 의심하게 했던 많은 장면은 메아리처럼 퍼지는 “까레아 우라!” 뒤로 빠르게 흩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열거한 영화의 상상력은 ‘역사를 어떻게 재현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신중하게 되짚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재현의 목적: 주체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면 이 신중한 재현의 목적은 무엇일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영화는 매우 목적론적이다. 이토가 제국의회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병합’이라는 범죄가 당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여기에 맞서는 독립운동이 꽤 절망적이었다는 당대의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영화가 의도적으로 누아르 스타일을 표방한 것은 범죄와 절망의 어두움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스타일은 안중근이 위인임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지는 않았다. 확실히 영화는 1년 정도에 걸친 안중근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는 똑같은 소재를 다룬 다른 역사 콘텐츠와의 차이를 고민하게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하얼빈>보다 먼저 개봉한 <영웅>의 경우, 안중근과 이토는 처음부터 영웅과 악인 그 자체이다. 여기에 등장인물의 고뇌가 들어갈 여지는 없다. 감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규정력

“

영화의 목적은 안중근의 회복에 더해 다른 인물들의 추락과 회복, 또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에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확실히 관객이 포함되어 있다.

”

이다. <하얼빈>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안중근을 곧바로 영웅으로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고 있지만, 감독의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든지 간에 그가 영웅으로 떠오르는 것은 필연이다. 왜냐하면 안중근은 역사적으로 고결함을 ‘공인’받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체를 회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있더라도 그것의 불가능성을 상상할 수는 없다. 이 인물은 ‘갈 지(之)’자 행보가 자연스러운 어떤 주체를 보여주기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영화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화의 목적은 안중근의 회복에 더해 다른 인물들의 추락과 회복, 또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에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확실히 관객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길을 잃은 인물들에 대한 시퀀스는 재현과 비(非)재현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체의 회복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에서 영화가 길을 잃은 인물들을 대비하는 장면은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 영화는 길을 잃은 사람을 곳곳에 배치하되 꽤 노골적으로 비교한다. 박점출의 등장을 보자. 영화의 목적을 이상과 같이 해석할 때, 그의 존재는 전혀 뜬금없지 않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중근의 든든한 동지였지만, 지금은 지린(吉林)에서 가장 큰 마적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스스로 “난 길을 잃었어요”라고 고백하고, “독립이 되면 장을 지진다”고 장담하며, 등장



안중근의 독립 유묵

안중근이 뤼순감옥에서 사형수의 교회사(敎誨師)로 활동했던 쓰다 가이준(津田海純)에게 써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히로시마현에 소재하는 간센지(願船寺)에 보관되어 있다가 2015년에 류코쿠대학에 기탁되었다. 사진은 2025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시 <안중근 書>에서 촬영한 것이다. 독립이란 두 글자를 어둠 속에서 선명히 보이도록 배치한 것이 인상적이다.

출처: 필자 촬영, 2025

부터 퇴장까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인 그는, 영화의 어느 장면에서 술을 끊었다고 말하는 안중근과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 역시도 독립에 필요한 폭탄을 구해주며 주체의 회복 가능성을 말해준다.

김상현은 주체의 회복, 그 자체의 화신이다. 밀정이 되고, 개처럼 취급당하는 장면을 보자. 이미 모리는 고문할 때부터 김상현을 가족이 벗겨진 개처럼 다루었다. 먹이를 던지며 “쿠에(食え)”라고 명령하는 일은 주체의 추락을 확신했기에 가능했다. 모리의 명령에 먹이를 허겁지겁 먹다가

“

모리의 죽음은, 김상현이 밀정이 되기 전에 독립운동을 할 팔자라고 서로를 다독였던 세 주인공의 대화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일깨워준다. 이때의 팔자는 현실을 체념하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 주체로서의 자신을 서로가 확인해 주는 단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자괴감에 오염하는 모습, 밀정이라는 사실이 발각되고 우덕순에게 살려 달라고 세상 서럽게 애걸하는 모습은 영화가 표현한 가장 나약한 인간상이다. 그의 울음은 동지를 대신해 산다는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졌음을 깨닫는, 절망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단지(斷指)는, 주체의 회복 가능성을 비웃는 원수에게 거꾸로 절망을 안겨주는 복수라고 할 수 있다. 김상현은 여전히 자신의 추락을 확신하며 새롭게 명령하는 모리를 단칼에 죽였다. 모리의 죽음은, 김상현이 밀정이 되기 전에 ‘독립운동을 할 팔자’라고 서로를 다독였던 세 주인공의 대화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일깨워준다. 이때의 팔자는 현실을 체념하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 주체로서의 자신을 서로가 확인해 주는 단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나는 영화의 의미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오로지 선해(善解)하고자 했다. 인간을 다루려는 영화의 긴장은, 안중근을 이순신에 대비하려고 하거나 ‘만주는 우리 땅’과 같은 국수주의적 수사 때문에 가끔 끊어지기는 했다. 누아르의 미감은 배우들의 외형 때문인지 ‘세련됨’이라는 불쾌감을 꽤 자주 주었고, 미학이 실증을 압도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영화는 식민지라는 역설을 고민하고, 실제와 허구가 고립되지 않고 교호하는 방식으로 상상했으며, 이를 재현하거나 재현하지 않음으로써 주체의 추락과 회

체험! 역사현장

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밀정이었던 김상현은 우덕순과 술을 마시며, ‘일본의 역사가 되면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이란 어쩌면 김상현의 정신적 방황과 같이, 앞의 독립 유묵 사진처럼 어둠 속을 헤매다 도달하는 가치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는 과거와 현재에 모두 해당할 것이다. 영화에서 역사성과 현재성은 같이 가고 있다.



전영욱(全煥旭, Jeon, Young-wook)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식민지 조선의 정치사, 법제사를 공부하고 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위상과 법의 역할-법률을 추수하는 제령의 의미」(『역사문제연구』 51, 2023), 「1920~30년대 ‘조선적 법치’의 성립과 제령의 역할」(『역사연구』 46, 2023), 「식민지 조선의 제령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개념, 공포, 추이」(『법사학연구』 66, 2022) 등이 있다.

중국의 새 대학교재 『중화민족공동체개론』과 한국고대사

임기환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1. ‘동북공정’을 넘어 ‘중화민족공동체’로

2000년대 초반 한때 한국 사회를 뜨겁게 들끓게 하였던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잊혔다. 20년이라는 시간에 기억이 희미해질 만도 하겠지만, 주된 이유는 동북공정의 본질에 대한 불철저한 이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은 주로 고구려사를 비롯한 ‘한국고대사 지키기 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역사 지키기’라는 게 딱히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고구려사는 한국사’라는 목소리만 높았다가 그 열기가 얼마 안 가 수그러들었던 것이다.

그 뒤에도 이른바 백두산공정이나 ‘장성공정’ 등이 때때로 언론에 의해 동북공정의 연장선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한국의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단



너인고성(納殷古城)

압록강 최상류지역에 위치한 여진족 마을. 백두산을 여진족의 성산으로 만들기 위한 장소이다.

오절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한중 네티즌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대로 아리랑이 2008년 중국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연주되고,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서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출발점으로서 동북공정이 소환되곤 하지만, 이를 새삼 사회적 관심으로 확장하지는 못했다. 단지 감정적으로 혐증 분위기만 점점 커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가장 최근에는 2022년 7월 중국국가박물관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의 고대 청동기 유물 전시회에서 일어났다. 한국 측에서 보낸 연표 중 고구려와 발해를 삭제하고 한국사 연표를 게시해 논란을 빚었고, 이에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항의하자 중국국가박물관이 한국사 연표와 중국, 일본사 연표까지 모두 철거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당시 이 문제를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간 것이 과연 적절했을까 하는 비판도 적지는 않

韩国古代历史年表
CHRONOLOGY OF ANCIENT KOREAN HISTORY

时期 Section	时代 / 王朝 Period / Dynasty	起止时间 Time Span
石器时代 (约70万年前—约公元前15世纪) Stone Age (c. 700,000 years ago—c. 15th century BC)	旧石器时代 Palaeolithic	约70万年前—约8000年前 c. 700,000—8,000 years ago
	新石器时代 Neolithic	约8000年前—约公元前15世纪 c. 8,000 years ago—c. 15th century BC
青铜时代 (约公元前15世纪—约公元前3世纪) Bronze Age (c. 15th century—3rd century BC)	古朝鲜 Gojoseon	? —公元前108年 ? -108 BC
	新罗 Silla	公元前57年—公元676年 57 BC—676 AD
铁器时代 (公元前3世纪—公元1910年) Iron Age (c. 3rd century BC—1910 AD)	百济 Baekje	公元前18年—公元660年 18 BC—660 AD
	加罗 Gaya	公元42年—562年 42—562 AD
	统一新罗时代 Unified Silla Period	公元676年—935年 676—935 AD
	高丽时代 Goryeo Dynasty	公元918年—1392年 918—1392 AD
	朝鲜时代 Joseon Dynasty	公元1392年—1910年 1392—1910 AD

注：本年表内容由韩国国立中央博物馆提供。

2022년 7월 중국국가박물관 청동기전시회의 한국사 연표

출처: 『중앙일보』 신경진 베이징특파원 제공

았다. 중국 측이 해당 연표를 수정하지 않고 철거한 행위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한국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확고하게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역사문제에 대한 대응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점도 어느 정도 수긍한다. ‘창바이산(長白山)문화론’¹이나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 문화를 다루는 정책도 그러하고, 특히 교과서 서술 등은 중국 내부 문

1 창바이산(長白山)은 중국에서 백두산을 부르는 명칭이다.

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 간의 현안으로 삼기가 그리 간단치 않다. 다만 한국의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일정한 대응 방향과 수준을 정해 놓고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동북공정에서 다루었던 역사와 변경 문제 등을 더욱더 이데올로기화해 나갔다. 애초에 동북공정은 당시 점점 심각해지는 변강(邊疆)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티베트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서남공정, 신장웨이우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북공정 등도 같은 목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로서, 동북공정은 이들 변강공정의 마무리 작업이었다. 여기에 직접 역사를 다루는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과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을 추진하여, 당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역사상을 구성하고 이를 통일적다민족 국가론, 중화민족론, 중화대가정론 등을 통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동북공정 이후 중국은 여러 계통으로 추진하였던 일련의 변강공정과 역사공정 및 이론적 탐색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거창한 통일된 이데올로기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특히 2012년 시진핑이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이후, 중국은 변화된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민적 정체성 창출과 이념화를 추구해 왔다. 그 핵심이 시진핑이 제시했다고 하는 ‘중화민족공동체’이다. 2018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정식으로 ‘중화민족’을 헌법에 써넣었다. 이러한 일련의 이데올로기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의 하나가 바로 2023년 12월, 중국의 국가민족사무위원회가 주관하고 교육부에서 최초로 통합교재로 채택한 대학교재 『중화민족공동체개론』이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중국의 소수민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산하기관이다.

“

2012년 시진핑이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이후, 중국은 변화된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민적 정체성 창출과 이념화를 추구해 왔다. 그 핵심이 시진핑이 제시했다고 하는 ‘중화민족공동체’이다.

”

편집위원인 허성량(何星亮)은 이 책을 이렇게 평가한다.

이 교재는 중화민족공동체 학문을 위한 기초적인 저작으로, 최초의 중화민족공동체에 관한 통합교재이며, 중화민족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교재다. 또한 중화민족의 형성과 발전을 전면적으로 논한 최초의 교재이며, 중화민족 역사관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교재다. 이 교재는 중화민족공동체 학문의 학문체계·이론체계·방법체계·역사자료체계·담론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로서, 중화민족공동체 학문의 발전에 큰 의미를 지닌다.

이렇듯 중국 내의 자체 평가를 통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교재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측면에서 최초의 교재라고 강조하듯이 이 교재에서 제시한 중화민족공동체가 앞으로 중국의 확고한 새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교재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은 필자를 포함하여 관련 전공학자들과 함께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분석과 별도로 일단 이 책이 갖는 기본 성격 및 한국 역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였다. 이 글은 여러 학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종합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다만 이 글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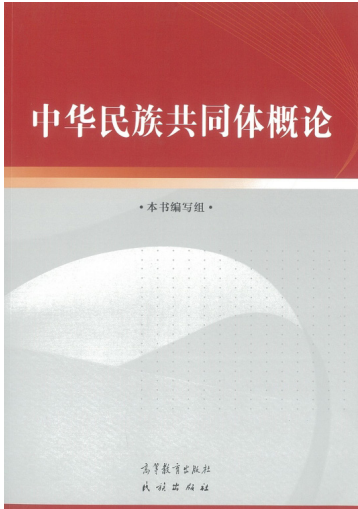
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2. 『중화민족공동체개론』은 어떤 책인가

먼저 이 『중화민족공동체개론』을 만든 인물을 살펴보자. 우선 편집위원회의 주임은 판웨(潘岳)인데,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부 부부장 겸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이다. 부주임은 벤바자시(邊巴扎西: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당조 부주임, 전국정협민족종교위원회 부주임), 쑤쉐위(孫學玉: 전국정협 위원), 양성민(楊聖敏: 중앙아시아연구원 학술위원회 주임) 3명이며, 그 외 19명 위원이 이 책의 저술을 담당하였다. 주임과 부주임의 정치적 지위를 보아도 이 교재가 갖고 있는 위상과 정치적·사상적 지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교재에서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각 장의 시작 부분에 시진핑 총서기의 발언을 먼저 제시하고 본문을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의 지도 아래 서술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체제이다. 이를 통해서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과 중국공산당 역사를 평가하는 존재이며, 현 중국의 진정한 이념적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역으로 보면 각 장마다 첫머리에 넣은 시진핑의 발언으로 인해 이 책은 그 권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따라서 이 책의 서술이 앞으로 중국 내 역사 해석과 정책의 기준이 되리라는 점 역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교재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장은 일종의 이론 영역이고, 3~16장은 역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 영역 중 1장은 중화민족공동체 기초이론, 2장은 중화민족 역사관을 다루고 있어 중화민족공동체론의 총설에 해당한다. 역사 영역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3~11장



『중화민족공동체개론』 표지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은 선사부터 청 중기인 1840년까지 근대 이전 중화민족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강 선사 시기, 4강 하상주 시기, 5강 진한 시기, 6강 위진남북조 시기, 7강 수당오대 시기, 8강 요송하금 시기, 9강 원 시기, 10강 명 시기, 11강 청 초중기로 구성하여 시기별 특징을 통해 중화민족의 기원과 형성, 대융합과 변영, 대통일, 중화일가(中華一家) 국면의 확립 등으로 중화민족공동체의 역사적 과정을 다루고 있다.

12강부터 16강까지는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중화민족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12강과 13강은 자각한 민족 실체로서의 중화민족이 형성된 1840년에서 1949년 시기를 다루고 있고, 14강과 15강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화민족이 변영하는 현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눈여겨 볼 점은 2012년을 분기로 14강과 15강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은 시진핑이 최고지도자로 등장하여 시진핑 시대가 시작

“

“중화민족에 덧붙인 ‘공동체’ 세 글자는 동의반복이 아니며, 중화민족의 통일성과 공통성, 불가분활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개념이며, 중화민족 다원일체 구도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

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도 이 책은 중화민족공동체에 대한 개론서이면서 동시에 시진핑 정권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이념적 교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이 교재는 3장 이후의 역사서술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역사서술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1, 2장의 내용이 더욱 주목된다. 동북공정 등 변강공정을 추진할 때 기초가 된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등 이론보다는 훨씬 진전되고 체계화된 이론적 틀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그동안 이런 이론적 틀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점 자체를 유의해야 한다.

이 교재에서 역사해석의 핵심개념은 시진핑이 제시한 중화민족공동체이다. 물론 이전에도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롭게 제시되는 중화민족공동체는 어떤 개념인가? 중화민족에 단지 공동체라는 용어를 덧붙인 것만은 아니다. 이 교재에서 “중화민족에 덧붙인 ‘공동체’ 세 글자는 동의반복이 아니며, 중화민족의 통일성과 공통성, 불가분활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개념이며, 중화민족 다원일체 구도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그리하여 “중화민족공동체는 각 민족이 조국의 광활한 강역을 공동으로 개척하고, 유구한 중국 역사를 공동으로 써 내려갔으며, 찬란한 중화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하고, 위대한 민

족정신을 공동으로 길러내는 역사 과정에서 융합하고 응집하여 만들어진 민족 실체”라고 주장한다. 즉 4개의 공동(共同), 강역·역사·중화문명·민족정신을 공유하는 실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원일체라고 하더라도 다원보다는 일체에 방점이 찍힌다. 그래서 “중화민족공동체는 국가 측면에서 민족 실체이며, 각 민족은 종속 지위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책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역사해석의 이론적 기준 중 하나가 중화문명론이다. “중화문명은 당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 형태로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문명이다. 위대한 문명은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낸다. … 이러한 중화문명 특유의 대일통(大一統) 제도와 정신은 중화민족이 충격으로 흩어져도 이를 극복하여 분열에서 화합하게 했고, 다원일체의 안정적인 구도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중화문명론에 입각한 중화민족론의 전개이다. 이는 과거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이 기초한 영토론적인 관점보다 훨씬 역사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중화문명의 확장성을 고려하면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중화주의로 설명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화문명은 초원문명, 해양문명, 중원농경문명을 모두 포괄하는 다원적 문명이며 그중 중원농경문화가 허브 역할을 하였다는 관점은 철저하게 한족 중심의 중화문명론이면서도 이를 통일적다민족, 다원적문화론으로 포장하고 있다.

앞서 전체 목차 구성에서 보았듯이 이 교재는 중국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역사교육 교재가 아니다. 서술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역사상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역사 사실이 파편화되어 오로지 중화민족공동체라는 정치적 이상을 위해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국민윤리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교재의 내용을 역사적·학술적 관점에서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망해질 정도이지만, 한국

“

현 중국의 민감한 정치적 문제의 하나인 신장 문제를
역사서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사와 관련된 내용은 언제나 역사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중화민족공동체개론』에서 한국사 관련 서술에 대한 검토

『중화민족공동체개론』의 역사서술에서 주변 지역 중,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지역은 이른바 서역으로, 서역 역사에 관한 기술의 비중이 다른 주변 국가와 민족에 비해 압도적이다. 현 중국의 민감한 정치적 문제의 하나인 신장 문제를 역사서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동북지역에 대한 서술은 소략한 편이다. 동북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왕조인 요와 금, 청의 경우는 중원왕조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주요 대상은 그 이전의 역사 즉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이다. 이는 동북공정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동북공정에서는 고구려와 발해 역사가 주요 대상이었지만, 이 책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갖는 대상이어서 기술 내용이 그리 많지 않다. 그중 이 책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는 한 대목을 인용해보자.

동북지역에는 고구려와 발해국이라는 변방정권이 존재했다. 두 정권의 통치영역은 일부 중복되었으나, 고구려는 오늘날의 중국 랴오닝성 동부, 지린성 동남부, 그

리고 한반도 북부에 걸쳐 있었으며, 발해국은 오늘날의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 북동부, 러시아 극동지역의 일부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들의 핵심통치영역은 중북되지 않았다. 두 나라 모두 한문과 한자를 사용하였으며, 중앙왕조의 책봉을 받았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위진 이래로 고구려 묘에서 발견된 벽화에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및 복희, 여와 등 중화문화의 상징이 포함되어 있다. 수양제와 당태종은 직접 고구려를 정벌하기도 했다. 당 왕조는 충장 원년(668) 고구려를 정복하고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으며, 그 영토를 9개의 도독부, 42개의 주, 그리고 100개의 현으로 나누었다. 고구려 왕족과 귀족, 그리고 수십만 명의 백성은 중원으로 이주하였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다른 민족과 융합됐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속말말갈의 수령 대조영은 698년 동모산(오늘날 중국 지린성 둔화 또는 옌지)에서 왕으로 자립하여 진국을 세웠다. 713년, 대조영은 당 현종으로부터 발해군왕으로 책봉되었고, 762년에 발해국으로 승격됐다. 발해국은 말갈인을 주축으로 하였으며, 한족, 거란족, 고구려인 등도 함께 거주했다. 926년, 발해국은 거란족에 의해 멸망했다. 한편, 918년 왕건이 한반도에 신라를 기반으로 고구려와는 다른 새로운 고려 왕조를 세웠다. (밑줄은 필자)

고구려와 발해가 역사적으로 ‘중국화’의 과정을 거쳐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변방정권임을 보여주는 여러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근거는 다른 소수민족이나 변방정권에 대한 기술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물론 그런 근거가 학술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이미 충분하다. 하지만, 개설적 서술인 『중화민족공동체개론』에서는 개별 역사 사실이 중화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구조 속에 배치되어 역사성을 잃고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중 고구려와 발해 역사만 따로 떼어내어 비판한다는 게 그리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일단 인용한

글에서 언급한 근거만 짚어보자.

먼저 중원왕조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는 점이다. 중국 측 역사서에 보이는 조공, 책봉, 번속이라는 용어가 갖는 실제적 내용이 무엇이냐는 학술적 검토는 이미 국내외 학계에서 대체로 종결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이를 어의 그대로 해석하고, 역사상의 국제관계 등에 적용하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국가 간의 관계(중원국가와 주변 변강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조공책봉론, 번속론 등 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되었기에, 새로운 비판보다는 이런 조공책봉론, 번속론 등이 중화민족공동체 이론체계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고구려와 발해가 한문과 한자를 사용하고 여러 문화 방면에서 중국문화에 동화되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여기서 이른바 ‘한자문화권’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문과 한자를 중화문명권의 도구로 바라본다거나, 당대 선진문화임이 분명한 중국문화의 수용과 변용 과정을 무시하고 이를 모방과 동화로만 설명하는 태도는 분명한 역사왜곡이다. 전근대에 중국의 주변 국가에서 중국문화의 수용이 적지 않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문화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전체 문화의 국제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문명을 기준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입장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화문명론이 패권적인 관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또한, 고구려의 주민이 중원으로 이주하여 융합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 책의 고구려 관련 서술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근거이다. 고구려 멸망 후 사민이 있었지만 이런 역사적 사실을 과장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앞선 시기에서도 관구검의 침입, 전연의 침입 등 여러 시기에서 고

구려 주민이 중원으로 이주했다고 유난히 부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화 민족공동체론에서 주민의 이주와 융합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용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외에도 무역, 네트워크 등 경제공동체를 강조하는 관점도 주요 논거의 하나인데, 이와 관련하여 해상실크로드의 연결망에 고구려를 포함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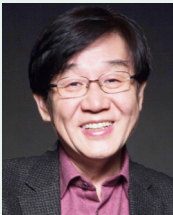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고려와 고구려는 전혀 별개의 왕조였다고 특기하고 있다. 즉, “918년 왕건은 한반도에서 신라인이 주체인 고려 왕조(또는 ‘왕씨 고려’라 칭함)를 세웠는데, 비록 ‘고려’라고 간략하게 칭하지만, 이전의 고구려 정권 및 당의 변속인 발해국과는 결코 계승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화민족공동체론의 ‘유구한 역사전통’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마찬가지로 한국사 체계에서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계승성과 역사전통을 해체하는 것이 시급할 수 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서술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화민족공동체개론』은 동북공정의 결과물과는 달리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서술이 아니다. 중국 역사권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함께 기술하면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대한 서술을 끼워넣기 식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책 전체에서는 서술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게다가 고구려, 발해 관련 서술을 다 모아 보아도 두 국가의 역사상은 어렵פות하게라도 구성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지역에도 적용하는 같은 이론과 서술 논리의 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이 책은 중화민족공동체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거시적 시각에서 개설로 다루고 있고, 동시에 통일적다민족국가론, 중화문명론 등 그동안 다듬어가면서 만든 나름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 관련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접근하는

것은 이 책의 논리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보듯이 중국의 역사해석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여기에 시진핑 정권의 권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사안이 되었다. 즉 역사문제가 양국 간 갈등 사안이 되더라도 해결 전망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동북공정 이후 20년 동안 찾지 못했던 해답이 지금 시점에서 쉽게 찾아질 리 만무하다. 사실 역사서술 자체보다는 그러한 역사서술을 추구하는 중국의 현실적인 동기와 요인이 더욱 중요하다. 동북공정 때 ‘고구려사 지키기 운동’에 머물렀다는 반성처럼 『중화민족공동체개론』에 대한 대응 역시 역사 지키기 등 ‘역사적’ 해답을 찾아서는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될 뿐이다. 이 책과 중화민족공동체론에 담겨 있는 중국의 현실적 과제와 전략을 분석하여 동아시아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정치적’ 해답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역사는 소유권을 다투는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다.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진정 역사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지난 20년 동안 얻은 교훈이 아닐까.



임기환(林起煥, Lim, Ki-hwan)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고구려 정치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기구로 설립한 고구려연구재단의 연구기획실장을 지냈으며 한국고대사학회 회장을 지냈다. 학교 역사교육은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 공부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제12호 2025 봄

발행일 2025년 3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박지향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차재복
편집위원 김철기, 박정애, 배현준, 이동욱, 이주연, 전영욱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39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매품

ISSN 2950-9696